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39 |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

인 쇄: 2016년 12월 28일

발 행: 2016년 12월 31일

편 자: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인: 부성옥

발행처: 도서출판 오름

등록번호: 제2-1548호 (1993. 5. 11)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0-8 서일빌딩 4층

전 화: (02) 585-9122, 9123 / 팩 스: (02) 584-7952

E-mail: oruem9123@naver.com

ISBN 978-89-7778-473-4 93340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 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제주평화연구원 편





## 서문

평화는 인간 누구에게나 소중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평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냉전의 와중에서 평화는 국가안보, 군사안보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의 평화는 국가 간 무력충돌의 부재를 의미하였고, 평화를 지키는 궁극적인 수단은 군사력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과 동남아에서 새로운 평화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평화 개념의 등장이 냉전의 종식을 앞당겼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평화의 개념에는 국가안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환경안보가 포함되었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군사력 대신 대화와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진들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0년부터

평화와 협력에 관련한 인식을 분석하여 왔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2016년 수행한 연구결과를 모아서 『2016 동아시아 평화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연구에서 도중윤 연구위원은 국제정치에서 평화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중윤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탈냉전 이후의 평화인식은 안보(security)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북아에서 이렇게 확장된 평화의 개념이 수용되고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도 새로운 평화의 개념을 수용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존의 분석의 대안으로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인택 연구위원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서자료의 분석에 특화된 KH Co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주포럼의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한인택 연구위원의 분석을 통해서 제주포럼의 참석자들이 평화와 협력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군사력과 외교가 여전히 국제관계에서 중요하지만 인식(perception)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평화와 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자국과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것이나 여러 가지 공공외교사업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국제협력과 평화증진을 위해서 주변국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한 인식이 강했던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확산하는 데에 저희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서정하



▶▶ 서문 \_ 서정하 / 5

:: 제1장 **국제정치에서 평화인식의 변화:**

고전적 평화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거쳐 생명의 정치까지 | 도종운

- I. 들어가는 말 • 11
- II. 고전적 평화, 시민평화, 국제평화 • 13
- III. 시민평화에서 생명 정치 • 25
- IV. 맺음말 • 33

**:: 제2장 이론과 통일정책:**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관 분석**

| 이성우

- I. 들어가는 말 · 41
- II.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론 · 44
- III. 분석결과 및 논의 · 56
- IV. 결론: 이론과 통일의 상관관계 · 74

**:: 제3장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내 엘리트의 인식**

| 한인택

- I. 문제 제기 · 91
- II.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와 제주포럼: 소개와 자료 · 93
- III. 연구설계 · 97
- IV. DRM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다자안보대화의 추세와 의제 · 99
- V. 제주포럼의 대주제와 세션 의제 · 105
- VI. 제주포럼의 기초연설과 세션 토의: 2015, 2016년 대주제 · 115
- VII. 제주포럼의 세션 토의: 아시아의 신질서와 미중관계 · 126
- VIII. 제주포럼의 세션 토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제 · 129
- IX. 요약 및 결론 · 131

▶▶ 필자 소개(원고 게재순) / 137

# 국제정치에서 평화인식의 변화: 고전적 평화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거쳐 생명의 정치까지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 I. 들어가는 말

20세기 이후, 국제정치학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주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sup>1)</sup> 그러나 과거 서구에서 평화의 기저는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기에 신학적·도덕적 정의, 법적 차원에서 고찰되곤 했다.<sup>2)</sup> 중세까지는 신의 은총에

---

1) 최근에는 학문 분과별로 ‘평화’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경제학 분야에서는 ‘산업평화,’ 인문·어문학에서는 ‘평화인문학,’ 종교에서는 ‘종교와 평화’ 등으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탈냉전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정영일(1990), 김운호(2001), 서울대 평화인문학연구단 편(2013), 김향제(2009) 참조.

근거한 평화가 주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 18세기 무렵까지 서구에서 평화는 대체로 '시민의 평화'였다. 17세기에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고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등장한 이후 평화는 사회계약을 맺은 공동체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생태, 즉 전쟁의 대립 개념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이는 19세기 이후 국제체제의 주요 행위자로 주권국가가 되면서 전쟁 수행 주체는 역시 국가가 되었기에 평화는 국가들 간의 문제로 확실히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평화는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주요 관념으로 인식하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냉전의 종식 이후 강대국들 간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전쟁없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아닌, 보다 앞선 평화 개념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반핵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환경, 생태 운동의 사회화는 탈냉전이 평화 개념과 맞물려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기저와 대상의 변화는 18세기 이전 유럽의 '시민평화'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보다 심화된 내적 성찰이 필요하게끔 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학은 여전히 전쟁을 비롯한 인간의 '폭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과거의 정치학이 지배와 폭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탈냉전 이후에는 폭력의 치유, 예방과 관련된 비폭력 정치학이 조명을 받고 있다.<sup>3)</sup> 이 같은 전제에서 이 글은 고전적 평화부터 냉전, 탈냉전을 거치면서 시도되고 있는 평화 개념들을 살펴보고, 특히 탈냉

---

2) 서구에서 '평화'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로 추정된다.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저작이다.

3) 이와 관련해서는 Paige(1993) 제3장 참조.

전 이후의 평화 관념은 안전/안보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에는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평화의 중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의제해온 국가 간의 평화를 넘어 보다 세밀화되고 내재화된 평화, 즉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로 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II. 고전적 평화, 시민평화, 국제평화

### 1. 평화 개념의 기원

서구의 고전적 전통에서 ‘평화’는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암시하는 체제 또는 질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개별적·심리적(신앙적)·사회적 산물이었다. 독일어의 경우 ‘평화(Friede)’는 원래 ‘사랑과 보호’의 상태를 일컫었으며 인간 상호간의 적극적인 도움과 후원의 관점이 강조되었다(빌헬름 얀센 2010a, 12). 그리스·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파스(Pax)는<sup>4)</sup> 좁은 의미의 평화뿐 아니라 태평성대, 풍요, 신의 가호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라틴어 Pax에서 유래한 프랑스어의 ‘평화(Paix)’는 현대어로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와 더불어 화합, 조화, 일치(concorde), 그리고 고요(tranquillité) 등의 뜻을 담고 있다.<sup>5)</sup>

---

4) 그리스에서는 에이레네(Eirene)라는 풍요의 여신.

이처럼 유럽에서 평화는 사회적 산물이되, 국가나 체계를 중심으로 생성되었다기보다는 근원적인 인간을 바탕으로 둔 “인간 마음의 산물”이었다(마이클 하워드 2000, 17).

체제 중심보다는 개인의 안정과 사물 그대로의 정상 상태를 일컫는 평화의 개념은 종교적,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샬롬(Shalom)은 ‘평화’, ‘평안’을 일컫는데, 천주교에서 미사가 끝난 후 신자들끼리 또는 신자와 성직자가 헤어지기 전에 마치 막으로 나누는 인사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은 체제적 차원의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가정의 풍요, 가족의 행복 등을 비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다.

또한 헬라어로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Eιρήνη)’는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로서 평화’, ‘인간의 종말론적인 구원으로서 평화’, ‘하나님과 화평으로서의 평화’, ‘인간 상호간의 평화’ 등 보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sup>6)</sup> 특히 삶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즉,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기보다는 근원적인 상태의 유지 또는 복원, 변화 없음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sup>7)</sup>

---

5) *Dictionnaire Hachette Encyclopédique* (edition 2001).

6) 에이레네, [http://www.torontoyoungnak.com/index\\_webzine.php?month=201311&idx=302](http://www.torontoyoungnak.com/index_webzine.php?month=201311&idx=302)(검색일: 2014.10.10).

7)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 1:3)” 이는 영어, “Grace be un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Corinthians 1:3),” 또는 불어, “Dieu notre Père et le Seigneur Jésus-Christ vous accordent la grâce et la **paix** (Corinthiens 1:3)”에 해당한다.

## 2. 종교적 평화와 인간의 이성

성서에 따른 ‘평화’는 신의 은총을 통해 종교적 절대자를 통해 구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신이 계시하는 평화는 인간 세계에서 여러 철학자(신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를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 정의하면서, 천상을 향해 지상의 인간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로 해석하였다.

“... 신체의 평화는 여러 부분의 질서 있는 조화이다. 비이성적 영혼(anima irrationalis)의 평화는 욕구의 질서 있는 휴식이다. 이성적 영혼의 평화는 인식과 행위와의 질서 있는 일치이다. 신체와 영혼과의 평화는 생물의 질서 있는 생활과 건강이다. 가사적(可死的) 인간과 신의 평화는 영원의 법 아래서 신앙에 의한 질서 있는 복종이다. 인간 상호간의 평화는 질서 있는 화합이다. 국가의 평화는 시민 가운데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질서 있는 화합이다. 천국의 평화는 신을 향수하고 신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화합하는 교류이다. 모든 것의 평화는 질서의 평온(tranquilitas ordinis)이다 ...”<sup>8)</sup>

말하자면, 그에게 평화는 ‘개별적 인간(신체와 영혼)의 평화’, ‘인간과 신 사이의 평화’, ‘인간 상호간의 평화’, ‘국가의 평화’, 그리고 ‘천국의 평화’ 등으로 나뉘었다. 개별적 인간이 신체와 정신적 조화를 이룬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질서와 화합을 이루어 건전한 사회를 이룰 때 이는 국가의 평화에 도달하며, 이러한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을 향수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들을 꿰뚫는

---

8) Augustinus, *De civitate Dei(City of God)*, XIX, 13,(6), p.174를 최상룡(2006, 64-65)에서 재인용.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로마는 세속적인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지상의 평화’는 불완전하며 상대적인 것으로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인 ‘천상의 평화’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며, 덕의 완성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 불과하였기에 허무하고 의심스러운 제한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었다(최상용 2006, 67; 빌헬름 안센 2010a, 22-23).

또한 가정과 국가의 평화는 질서화된 명령과 순응에 입각한 시민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이때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에 기초를 둔 사회구성원들 간의 조화는 중요한 덕목이었다.<sup>9)</sup> 따라서 지상에서 평화의 달성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질서잡기와 이를 지지하는 종교의 역할이 연관성을 가지고 지향하는 목표였다(박의경 2010). 그러나 신의 은총에 기댄 이 같은 평화는 종교적·신앙적 테두리 내에서의 평화였기에 인간이 수립하는 평화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드러내고자 했던 평화는 결국 신학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었기에 국가나 사회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다. 그는 국가와 정치가 신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혼돈을 치유하기 위한 인간의 장치였으므로 필요악 정도로 인식할 뿐이었다(유홍림 2012, 47-48).

---

9) 아우구스티누스는 ‘평화’를 정상적인 상태로, ‘전쟁’을 예외 상태로 보았는데(빌헬름 안센 2010b, 36), 이때의 전쟁을 현대국제정치학에서 일컫는 ‘국가 대 국가가 벌이는 무력 충돌’로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따른다. 주권 국가의 개념이 17세기 베스트팔렌체제 이후 등장하였고, 홉스 식의 국가 개념이 다른 나라와의 투쟁으로 전이되는 것도 역시 같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안센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국제관계에서 등장하는 전쟁 개념이 19세기 이전에는 무제한적으로 수용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빌헬름 안센 2010b, 38). 따라서 이때의 전쟁은 현재의 개념으로 보자면, ‘분쟁’, ‘집합적 폭력 상태’ 정도로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평화가 ‘만물의 정상적인 상태’로 이해되고, 질서잡기가 중요해지  
 한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평화는 법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을 실현된 질서로 이해하는 한 중세에는 평화와 법이 동일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빌헬름 안센 2010a, 19).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  
 에 기반한 인간이 발휘하는 정치적 삶은 그 안에서 권력이 정당하게 획  
 득되고 공공을 위해 행사될 때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유희  
 림 2012, 49). 때문에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리 법을 향유하는 현  
 실정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형성된 현실정치,  
 곧 인간 공동체는 평화를 목적으로 전체적인 형세가 다스려진다는 것이  
 다(빌헬름 안센 2010a, 30).

이성에 근거한 인간이 수립한 인간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를 구성하며, 그 자체의 법—세속법—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자연법’의 근거가 된다.<sup>10)</sup> 즉, 신이 부여한 법이 영원법(eternal  
 law)이라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일부나마 영원법을 포착한 것이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법을 통해 신의 도덕  
 룰로써 인류의 질서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신이 구축한 천상의 완전한  
 세계—평화—를 자연법을 통해 인류에게 일부나마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법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인간 세계의 평화는 ‘만물의 정상 상태  
 로의 환원’의 근거를 신의 은총에 기대되, 신의 힘이 아닌 인간의 염원

---

10) 이때 지칭되는 ‘법’이란 ‘정의(iustitia)’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롤스나 노직이 서술하는 ‘정의’ 관념과는 다르다. 롤스나 노직은 로크,  
 루소 등이 전개한 사회계약론에서 인간들이 서로 맺게 되는 계약의 최초의 상태  
 와 관련한 분배로서의 정의, 즉 공정성과 연계된다. 자세한 것은 Rawls(1999),  
 Nozick(2013) 참조.

과 노력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사회적으로 다른 인간들과 어울려 조화로운 상태—즉,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제는 신의 힘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기초가 놓이게 된 것이다.

### 3. 시민평화

평화가 신학적 믿음의 테두리 내에서 머물고 있는 한, 국제평화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퀴나스는 “은혜를 만드는 은총이 없이는 진실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는데,<sup>11)</sup> 이는 종교적 믿음이 같은 이들에게만 은총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세의 평화 관념은 특수한 평화였다. “기독교도와 이교도 간에는 기껏해야 일종의 ‘공존협정 (concordia)’만이 가능할 뿐”이었다(빌헬름 안센 2010b, 37).<sup>12)</sup> 그러나 중세를 넘어서면서부터 통일된 세계관, 즉 신학 이후의 통합적인 세계관이 인간 중심으로 서서히 옮겨가면서 자연법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는 한편으로는 신의 은총을 갈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율타리를 넘어서신 인간 세계의 평화 관념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5~17세기를 거치면서 에라스무스, 마키아벨리, 그로티우스 등이 평화를 전쟁의 대립관념으로 보고 논구한 바 있으나, 그것은 현대 국제정

---

11) 빌헬름 안센(2010b, 36)에서 재인용.

12)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자면, 절대적 신의 은총에 의한 평화를 ‘보편적 평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교도와의 관계마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평화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치에서 언급되는 전쟁과 평화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대전의 양상은 총력전(total war)의 성격을 띠지만,<sup>13)</sup> 당시의 전쟁은 군주들 간의 전쟁, 궁정의 전쟁이었고 이는 기독교라는 넓은 틀 안에서의 경솔한 인간들이 벌이는 악덕일 뿐이었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군주, 성직자, 관리 등의 태도와 의지에 따라서 전쟁의 범위와 양상이 이성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최상용 2006, 103-145), 이는 평화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일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홉스(Thomas Hobbes)의 등장은 인간 중심의 평화, 즉 시민평화를 본격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홉스가 보기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보전과 이익추구를 갈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과 절제를 통하여 자신을 보전하려는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들의 계약에 의해 이러한 욕구가 제한되는 상태—평화—역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그 공동체는 유지의 이유가 있다. 그가 볼 때 인간 세계의 불안과 공포는 자연 상태였고, 오히려 주권자에게 인간의 자연권을 양도하여 이러한 불안을 해소한 상태는 인위적인 것이다.

차선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최고 악(惡)을 탈피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인간 세계의 평화는 이성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들의 집합체가 만들어진 조화의 상태다. 이때 시민들은 근대적 시민 또는 개인과 전혀 다른, 복

---

13) 이는 크게 네 가지 면에서 과거의 전쟁과는 다르다. 첫째, 자국의 전쟁에 대해 감정과 확신을 갖는 국민의 구성비, 둘째, 전쟁에 참가하는 국민의 구성비, 셋째, 전쟁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 구성비, 넷째, 전쟁이 추구하는 목표 등에서 총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Morgenthau & Thompson 1985, 392).

14)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십자군 전쟁은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교도들과 다른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종과 법 적용의 대상이며 공동체 관념에 포섭된 개인이라는 한계점을 갖기는 하지만(박성진 2013), 신의 은총에 기대하지 않고 사회계약을 통해 집단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사회의 출현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홉스가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정의나 법과 같은 의미와 다름없던 평화 관념의 변화다. 즉, ‘만물의 정상 상태’, ‘질서와 조화’를 정의와 법의 틀로 형성하려던 종교적 평화 관념은 어느새 공포와 두려움의 대립 관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이기적 인간 본성에 기인한 타자의 착취에 대한 경계심이 함께 수반되며 발동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홉스적 아이디어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계약의 형태가 곧 대의제, 민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국가 성립 이전의 국제 간 분쟁이 주로 군주들의 싸움이었던면, 이는 군주제를 개혁함으로써 전쟁을 피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계약이 반드시 공포와 두려움의 탈피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공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시민평화의 중요한 준거점이 되었다. 루소가 보기에 인류는 서로 파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몇몇 개인들 간 야기될 수 있는 우발적인 전쟁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또한 군주들 간의 문제일 뿐이었다(김용구 2001, 92-94). 이는 인간 이성에 의한 사회계약의 이유가 반드시 소극적인 의미의 두려움과 공포의 회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을 거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제1확정 조항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이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시민들이 입법의 근거가 되는 공화정체가 국가 간의 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임마누엘 칸

트 2008, 26-29).

전쟁의 발발 여부를 국민이 결정하는 공화정에서는 전쟁의 피해를 군주보다 더 크게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전쟁을 선뜻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개는 신의 은총에 의한 만물의 정상 상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신의 은총을 자연법에서 찾으려 했던 전통, 인간 이성의 성찰을 통해 본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계약으로 발전되면서 ‘시민평화’의 개념으로 심화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최종점은 공화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평화 관념은 ‘만물의 정상 상태’로서의 평화 개념보다 협소해진 것이었다. 이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의미의 평화였다. 다만, 이 같은 평화 개념은 중세까지도 이교도와 의 다툼 정도로만 치부되던 전쟁 개념과 대립되는 관념으로 변형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사회는 공화정에 밀접한 정치체제였고 이러한 체제만이 군주들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 관념의 전개는 만물의 정상 상태에서, 정의와 법으로, 두려움의 회피 또는 폭력 상태의 정지로, 다시 전쟁의 대립 관념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반된 인간사회의 모습은 신의 은총에 기댄 인간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들의 본성을 극복하는 정치체제를 창출하려는 노력으로 변화되어 갔다.

#### 4. 국제평화

루소와 칸트에 이르러 평화 문제는 이제 정치체제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는 평화가 신의 은총이나 질서와 조화, 법과 정의, 두려움의 회피

를 넘어 이제 국제정치의 문제로까지 외연을 넓혀가는 기저가 되었다. 물론, 칸트 이전에도 ‘평화’는 ‘싸움’ 또는 ‘다툼’의 대립 관념으로 파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대국가체제 이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 어긋난 상태 또는 세계관이 다른 이교도와와의 다툼, 또는 군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분쟁이었다.

홉스가 말한 ‘만인 대(對) 만인의 투쟁’도 단순한 의미로 보자면, 사회적 상태의 국가를 전제한 국가 간 다툼이 아닌 자연 상태 속의 인간들 싸움이였다. 그러나 18세기 말까지 ‘국가 간(inter civitates) 평화’는 여전히 ‘시민평화(pax civilis)’에 비교할 때 열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빌헬름 안센 2010b).<sup>15)</sup> 또한 ‘시민평화’에서 정의와 법은 여전히 중요했다. 부당한 폭력에 의한 침묵이 아닌 올바른 법에 기초한 평화는 사회계약에 의거한 논리의 중요한 기초였을 뿐 아니라 이성에 의한 선택이었다.<sup>16)</sup>

이런 가운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평화 관념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의 현실 — 즉, 주권 국가들끼리의 충돌 — 을 다루면서 재인식되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맺어진 일련의 조약과 회의들(1814년 1차 파리

---

15) 빌헬름 안센(2010a, 37) 및 (2010b, 57)의 번역본을 보면, ‘inter civitates’를 ‘국가들 사이에서(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시민공동체들 사이에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들이 결합된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가 국가일 수는 있으나, 홉스가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국가’를 염두하여 civitate를 언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16) 자연법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정의와 법의 평화 관념은 이성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다. 이때 이성은 칸트적 전통과 벤담의 공리주의적 전통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곧 평화를 담보하는 정의와 법이 실천 이성에 의한 도덕적 의지에 의한 것인지, 공리주의적 합리적 선택에 의해 지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빌헬름 안센(2010b, 63-80) 참조.

조약, 1814년 빈회의, 1815년 2차 파리조약, 1815년 신성동맹조약)의 주된 내용은 전쟁 전 원래 국경선으로의 회귀와 국제체제에서 세력구형의 확립이었다. 훗날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라고 불리게 되는 당시의 유럽은 비로소 평화의 문제를 근대 국가들 간의 전쟁을 중단한 상태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국가는 대체로 입헌군주제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 군주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민족국가, 영토국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평화’는 시민적 평화보다는 국제적 평화에 좀 더 방점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815년 11월 20일에 체결된 제2차 파리조약에서 4국 동맹조약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 본 조약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현재 세계의 행복을 위하여 4군주들을 이처럼 밀접히 단합시키고 있는 결속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군주 자신들이 직접 주최하거나 또는 그들 대신들에 의해서거나,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의 공동 이해를 협의하고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회의와 회의 사이에 모든 국가들의 평온과 번영을 위하여 또 유럽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가장 유익하다고 간주된 조치들을 고려하는 데 합의한다...”<sup>17)</sup>

이처럼 19세기 이후 평화는 영토국가, 민족국가, 입헌국가들의 ‘조약’에 의한 것이었고,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평화는 국제정치질서의 준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체제에 편입된 모든 나라들의 평화를 확보해주지는 않았다. 소위 유럽협조체제의 시기는 단지 “외교적 흥정과, 사기 거래, 분쟁을 연기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회

---

17) 김용구(1993, 49)에서 재인용.

피한 시기였을 뿐이었으며, 단지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중단된 시기였을 뿐”이었다(Morgenthau & Thompson 1985, 369).

한편, ‘평화’란 국제사회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국가들 사이의 논의 주제라는 것은 20세기 들어 국제정치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는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거에 비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그 어떤 형태의 다툼과 불화보다 막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899, 1907년의 두 차례 헤이그 회의에서 결의된 ‘무력사용의 제한’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제도적으로 보다 완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평화를 단순히 ‘국가 간 폭력이 중지된 상태(*la suspension, plus ou moins durable, des modalités violentes de la rivalité entre unités politiques*)’로 정의하였을 경우에는 균형이나 패권 그리고 제국에 의한 폭력의 부재와는 구분이 어렵다(Aron 1984, 157-161). 이러한 생각은 기존의 이상주의적 평화 관념이 실천의 영역에서는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평화를 위한 물리적 틀뿐 아니라 정신적 관념의 세계와의 결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낳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의 원칙을 지키면서 숙고와 협의를 통한 다자주의 원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sup>18)</sup>

---

18)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유럽통합운동은 평화가 실천과 관념으로 재정비된 경우다. 이를테면, 기독교민주당 계열 및 사회당 계열의 유럽인들은 1947년 12월에 “유럽통합을 위한 국제협력운동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Movements for the Unification of Europe Committee)”를 조직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듬해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양 진영이 모여 대회(*congress*)를 개최하였다. 윈스턴 처칠이 의장이 된 이 회의에 유럽 전역에서 약 800명의 사회, 정치 대표단이 참석하여 유럽의회와 특별이사회를 만들기로 잠정합의하였다. 이들 기구는 유럽의 경제, 정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 III. 시민평화에서 생명 정치

#### 1. 국제정치에서 평화: 안보 개념으로

탈냉전 이후 평화 문제는 오히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 앞선 연구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냉전(冷戰)체제에서는 적어도 양극단 세력의 열전(熱戰)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는 무의미하였다. 냉전은 전쟁은 부재하였으나 공포와 두려움은 그 어느 시기보다 심했다. 따라서 냉전 이후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라기보다는 이를 포괄적으로 재해석한 ‘안보’ 개념과 그 실천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였다. 평화 개념이 안보 개념으로 외연을 변화시킨 것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정치 수준의 분쟁과 갈등의 변형을 탐구대상으로 하고 있었고(Buzan & Weaver 2003),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는 미시적 관점의 폭력행위와 그 구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Galtung 1996; 2004)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여러 분파를 이루어 다양한 안보 관념을 도출하다가 다시 그 합일점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의 등장이었다.

인권과 인류의 복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ed Programme)이 발표한 인간안보개발연구서에 기초한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으로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언급되던 국가안보

---

성과는 제도적 차원의 유럽통합뿐 아니라 평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개념은 주권국가의 역할과 상호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었다(전웅 2004; 박휘락 2010; 이해정 & 박지범 2013). 탈냉전 이후의 이러한 움직임은 평화의 관념이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간접적 또는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나눈다. 이를 다시 ‘평화’로 구분할 경우, 전자는 ‘국가안보’로, 후자는 ‘인간안보’로 나누어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미래의 안보 관념이 결국 정치적 측면을 넘어, 경제적·문화적 맥락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Galtung 1996, 9-69).

## 2. 평화의 조건: 빈곤퇴치와 개발협력

2015년 9월 UN총회는 또 한 번 새로운 평화 개념을 내놓았다. 즉 안보 개념을 넘어 개발과 평화를 하나의 축으로 묶는 시도였다. UN은 2015년으로 만료되는 MDGs의 후속 아젠다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 아젠다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동반자(partnership)라는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지속가능 개발 목표(goals) 17가지와 세부 과제(targets) 169개를 제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전의 MDGs와 비교하여 특히 구분되는 것은 개발 계획안에 ‘평화’를 키워드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즉, 공포와 폭력이 없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만 개발목표가 추진될 수 있으며,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19)</sup> 기존의 관념에서 개발이 평화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인 연결 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 과제와 평화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통계적으로 절대빈곤은 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절대빈곤인구의 75%가 분쟁이 심한 국가에 거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었고,<sup>20)</sup> 따라서 2030년까지 지구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자는 SDGs의 목표는 분쟁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를 연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10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첫째, 사망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 둘째 어린이에 대한 고문, 유인, 착취, 성적(性的) 학대 종식, 셋째, 법치주의 확립, 넷째, 2030년까지 불법무기 자금 유입 감소 및 도난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 범죄와의 전쟁, 다섯째, 부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여섯째, 각종 제도에서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 일곱째, 정책결정

19) UN Sustainable Development, "Preamble, i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검색일: 2016.12.08).

20) 손혁상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세계 인구의 20%가 분쟁지역이나 취약국가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 비율이 43%까지 증가했으며,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2030년에는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심각한 폭력사태를 경험한 국가는 폭력사태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보다 빈곤율이 21%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2015년에 MDGs 8개 목표 중 단 한 개도 달성하지 못한 일곱 개 국가는 모두 심각한 폭력사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JPI PeaceNe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평화: 평화의 2030 아젠다 포함 과정에서의 논쟁과 그 의미," 『제주평화연구원』, 2016.12.6.

에서 책임성, 포괄성, 참여의식, 대표성 확보, 여덟째, 구체적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개발도상국가의 폭넓은 참여 강화, 아홉째, 2030년까지 출생신고 등을 통해 모든 이들의 법률적 정체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를 망라하여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대중의 정보 접근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테러리즘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가 수준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차별철폐법 확립 및 지속가능 개발정책을 진흥시킨다는 것이 강조되었다.<sup>21)</sup> 이처럼 평화는 환경과 조건의 안정화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확립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다.

### 3. 생명 정치: 별거벗은 생명, 예외 상태

갈통이 지적한 대로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문화적 요소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Galtung 1996, 196-264). 따라서 구조적으로 파악되는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관계를 넘어 자연과 자이를 포함하는 제3의 요소들은 또 다른 폭력적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는 공존과 삶의 나눔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적 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념의 변화, 사상의 발전, 미세하게 흐르지만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사회적 기운 등을 포착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 21세기 인간의 삶은 이러한 요인들 속에서 ‘정상 상태’를 복원한 인류의 모습을 담는 데 평

---

21)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i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검색일: 2016.12.08).

화의 지향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물리적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과거의 요구를 넘어, 규범적·경험적·이론적·제도적·교육적 혁명을 통해 비폭력 정치학을 지구사회 전체에 퍼뜨려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Paige 1993, 63).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신의 은총에 기인한 종교적 접근, 자연법에 근거한 정의적 접근, 인류의 내적 성찰과 확신을 통한 이성적 접근, 주권 국가 성립 이후 냉전시대까지 이어져온 군주들의 다툼 또는 전쟁이 부재한 상태로서의 평화, 그리고 탈냉전 이후 (인간) 안보적 관점을 넘어 지배-피지배의 권력을 보다 세밀하게 재성찰하는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미시세계에서 은폐된 채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 무의식적 폭력을 폭로하기 위한 전초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을 조화시켜 긍정적인 세계로 돌입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연법 등장 이후 ‘법’은 ‘정의’라는 원관념을 지상세계에서 뿌리 내리게 하는 틀이었다. 법치주의, 혹은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원리로 이는 통치의 주요 근거가 된다.<sup>22)</sup> 이런 맥락에서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논증은 문화—자아—안보—평화로 역추적되는 지적 흐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법(정의)은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되는데, 아감벤은 바로 ‘벌거벗은 생명-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테제를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sup>23)</sup> 벌거벗은 생명이란 “살해는 가능하되 희

---

22) 예컨대,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규범을 드러낸 리스본 조약 서문에서, 유럽의 문화적·종교적·인문주의적 전통으로 인간의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가치의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 등을 열거하고 있다(TEU Preamble).

23)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법치주의’의 실천과 모순되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칼 슈미트의 ‘주권이론’에서는 이미 예외자로서 주권자를 제시

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을 일컫는다(아감벤 2008, 45).<sup>24)</sup> 이러한 모순적인 의미를 지닌 호모 사케르가 탄생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 오히려 결정적인 것은 모든 곳에서 예외가 규칙이 되는 과정과 더불어, 원래 범질서의 주변주에 위치해 있던 벌거벗은 생명의 공간이 서서히 정치 공간과 일치하기 시작하여, 이런 식으로 배제와 포부, 비오스와 조에, 법과 사실이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비식별역으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 상태는 벌거벗은 생명을 법적·정치적 질서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포섭하면서 바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정치체제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숨겨진 토대를 실제적으로 수립했다. 예외 상태의 경계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경계 안에 머물러 있던 벌거벗은 생명은 도시(국가)에서 해방되어 정치질서를 둘러싼 갈등들의 주체이자 대상, 즉, 국가 권력이 조직되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sup>25)</sup>

신의 은총을 인간의 이성으로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고 믿었던 자연법은 정의이자 평화의 관념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법도 항상 예외를 두고 있다(김태환 2004). 법의 예외는 ‘벌거벗은 생명’뿐 아니라 법을

---

하며 예외적 존재의 가능성을 설파한 바 있다. 아감벤은 ‘강제 수용소’를 법의 예외 영역으로 제시한다(2008, 235-353).

24)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단어의 1차적 의미로 보면 단지 ‘신성한 인간’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보다 복잡하다. 고대로 마법을 통해 전해지는 호모 사케르는 다음과 같다. “호모 사케르란 사람들이 범 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그를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아감벤 2008, 156).”

25) 아감벤(2008, 46-47).

최초로 수립한 자—주권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권자는 원천적인 예외 속에 있으나 별거벗은 생명은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폭력이 모든 종교적·법적 의미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다시 말해 ‘별거벗은 생명’은 법을 넘어선 예외자 즉, 주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주권자의 임무가 “불법과 위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생명관계들의 정상적인 구조화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아감벤 2008, 74). 따라서 같은 예외 속에서도 주권자와 별거벗은 생명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별거벗은 생명이 법과 정의로부터 예외적 관계로 놓임으로써 오히려 법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없음으로 해서 그 있음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성의 발견 이후 인간의 삶은 정치적·사회적 삶(bíos)으로 규정된 듯하나 그 이면은 그렇지 않았다. 생물학적 삶(zoé)이 보다 우위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 개체의 평화, 즉 인권의 발전에 따른 것과 연관이 있다. 홉스가 논구한 자연 상태 속에서의 인간(zoé)은 사회계약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적 삶(bíos)에 돌입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삶의 공통적 기저는 여전히 생물학적인 삶이었다. 이는 보편적 인권 개념의 기저가 사회적 삶에 따른 차별이 아닌 생물학적인 삶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평화’는 정치적·법적 권리의 궁극적 근거가 생물학적 차원의 별거벗은 삶이었기에 가능한 논리였다. 이는 아감벤의 생명 정치가 결국은 ‘근대의

---

26) 주권 권력은 자연 상태와 외부 상태 모두와 결부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외부에 있으면서 내부에 있는 피비우스의 띠와도 같기 때문이다. 즉, “주권 권력은 외부와 내부, 자연과 예외, 퀴시스와 노모스의 부분 불가능성 자체를 말한다(아감벤 2008, 97).” 또한 아감벤의 주권 권력에 대한 많은 논의는 유희림 & 홍철기(2007), 예파 고일렌(2010), 엄순영(2013) 참조.

보편주의적 정신은 권리 주체로서의 인간을 생물학적 소여로 환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김태환 2004).

근대 국가 수립 이후 20세기까지 제시된 국제평화 역시 ‘시민평화—정치적·사회적 삶’의 확대된 형태였으며, 탈냉전 이후 등장한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했다. 근래에는 제도를 통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빈곤퇴치를 통한 평화의 조건을 확보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생물학적인 삶, 즉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은 푸코가 이야기한 대로 정치의 영역에서 ‘생명 권력’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은 다시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생명 정치’라고 보았다(김환석 2013, 17).<sup>27)</sup>

우리는 현대사에서 배제를 통해 생명을 다루었던 강제수용소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내에서 생명 정치는 비교적 최근의 성과로, 과학기술과 생명과 연관관계, 생태학적인 관점(김환석 2013; 박명규 외 2013) 등으로 연구되어왔다. 이들의 주장은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학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적인 전제를 제시하거나(김환석 2013), 과학을 통한 발전지상주의에 대한 대안이 곧 평화를 달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박명규 2013).

이제 21세기는 신의 은총과 이성적 인간을 넘어선 변증법적 평화 개념을 모색해야 할 때다. 생명 정치의 근원은 이성적 인간이 구획한 예외

---

27) 푸코는 생명 정치(biopolitique)가 자유주의 전략을 통해 통치성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셸 푸코(2014) 참조.

상태의 ‘벌거벗은 생명’이 모순과 역설을 넘어 미결정 상태의 생명을 보다 근원적으로 밝힐 때 가능하다. 생명 정치의 시작은 바로 예외 상태의 극복이며 해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는 매우 작은 활동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지향하고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적 평화이다.

#### IV. 맺음말

‘만물의 정상 상태’를 신의 은총이라고 여기던 평화의 관념은 ‘자연법’과, ‘이성의 발견’을 거쳐 ‘시민평화’와 ‘국제평화’까지 변모를 거듭하였다. 더불어 고전적 의미의 평화(소극적 평화)를 넘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맥락의 평화구조의 조건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평화가 정책적 실천의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명 정치에 따르면, 벌거벗은 생명의 탄생 또는 재구성은 오로지 주권 권력의 몫이었다. 벌거벗은 생명의 탄생은 우리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예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폭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본다. 폭력이 법과 정의도, 인간의 이성도, 또한 만물의 정상 상태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폭력을 통해 새로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향후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벌거벗은 생명’의 근원을 보다 성찰하여 생명 정치로 승화시키는 것이다.<sup>28)</sup> 서양의 문명 발전과정과는 거리를 두었던 동아시아의 역사는, 아감벤 식으로 말하자

면, 오랫동안 역외자의 모습으로 예외성을 띠고 있었다.<sup>29)</sup> 식민지배를 받은 한반도는 세계사에서 사실상 ‘호모 사케르’였다. 주권자는 한반도를 예외 상태에 두면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귀결시켰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호모 사케르’는 신앙과 이성, 법과 정의를 넘어 예외 상태의 모순과 역설을 넘어 미결정 상태의 근원을 밝힐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주권자는 누구인지, 그러한 권력은 무엇인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벌거벗은 생명,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생명 정치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국제정치의 평화인식이 생명의 평화인식으로 재정착하여 동아시아, 작은 것, 일상의 것에 멈춰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평화는 재구성되며, 삶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

28) ‘생태(또는 녹색정치)’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을 통한 평화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생명 정치는 목적론적이라기보다는 성찰적이라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생명 정치는 권력관계의 경계와 그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폭력의 성립과정을 드러내는 데 더 큰 비중을 둔다.

29) 제주는 조선시대 이후 그 어느 곳보다 ‘민란(民亂)’이 자주 발발하였던 곳이다. 1863년 ‘강제검의 난’, 1901년 ‘濟州島辛丑教難’ 및 현대사의 몇몇 민중운동.

## ■ 참고문헌 ■

- 김용구. 1993.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1. “전쟁상태론.” 『평화를 위한 외로운 산책자의 꿈: 루소와 국제정치』. 윈.
- 김운호. 2001. “산업평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 구현.” 『밝은 사회연구』 22권 1호. 307-343.
- 김진호 & 고경민. 200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평화거버넌스.” 『지방정부연구』 9권 1호. 109-128.
- 김태환. 2004. “예외성의 철학—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 권력과 별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17권 3호. 1281-1297.
- 김향제. 2009. “종교평화의 시작, 관용.” 『평화학 연구』 10권 3호. 203-218.
- 김환석. 2013.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 97호. 13-38.
-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 2000. 『평화의 발명』. 서울: 전통과 현대.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2014.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 박명규·김성철·김찬수 외. 2013. 『녹색평화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 박성진. 2013. “홉즈와 개인, 그리고 개인주의.” 『인문학연구』 45권. 293-322.
- 박의경. 2010. “로마제국과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와 정치질서 그리고 평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8권 3호. 7-30.
- 박휘락. 2010. “천안함 사태 이후의 인간안보의 논의 방향: 국가안보와의 조화

- 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1권 3호. 355-376.
- 빌헬름 안센 지음,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젤렉 역음. 한상희 옮김. 2010a.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4: 전쟁』. 서울: 푸른역사.
- \_\_\_\_\_. 2010b.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 서울: 푸른역사.
- 서울대평화인문학연구원. 2013.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 엄순영. 2013. “아감벤의 주권의 논리.” 『법철학연구』 16권 3호. 39-68.
- 에바 고일렌(Eva Geulen). 2010. “조르지오 아감벤의 주권이론.” 『독일어문화권연구』 19권. 315-335.
- 유홍림 & 홍철기. 2007. “조르지오 아감벤의 포스트 모던 정치철학: 주권, 혈 벗은 삶, 그리고 잠재성의 정치.” 『한국정치사상사학회』 13권 2호. 155-182.
- 유홍림. 2012. “제3장 정치사상: 서양편.”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37-78. 서울: 박영사
- 이혜정 & 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1-37.
-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2008. 『영구평화론』. 파주: 서광사.
- 전 응. 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권 1호. 25-49.
- 정영일. 1990. “산업평화의 전망과 노동 및 농촌 문제.” 평화강좌. 고려대평화연구소. 233-268.
- 조르쥬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최상용. 2006. 『평화의 정치사상』. 파주: 나남출판.
- JPI PeaceNe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평화: 평화의 2030 아젠다 포함 과정에서의 논쟁과 그 의미.” 『제주평화연구원』, 2016.12.6.
- Aron, Raymond, 1984.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Paris: Calmann-Lévy.
- Buzan, Barry, and Ole Weaver. 2003. *Regions and Power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London: SAGE.

- Dictionnaire Hachette Encyclopédique* (edition 2001).
-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 \_\_\_\_\_. 2004. *Transcend and Transform*, London: Pluto.
- Morgenthau, Hans, and Kenneth Thompson. 1985. *Politics Among Nations* (6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Nozick, Robert. 2013.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
- Paige, Glenn D. 1993. *To Nonviolent Political Science: From Seasons of Violence*. Honolulu: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 Rawls, John.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Treaty of Lisbon, 2007.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i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검색일: 2016.12.08).
- \_\_\_\_\_. “Preamble 16 i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검색일: 2016.12.08).

## • 국문

국제정치학은 전쟁을 비롯한 인간의 폭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과거의 정치학이 지배와 폭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탈냉전 이후에는 폭력의 치유, 예방과 관련된 비폭력 정치학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전제에서 이 글은 고전적 평화부터 시민평화, 현대적 평화 개념들을 살펴보고, 특히 탈냉전 이후의 평화인식이 안전/안보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의제해온 국가 간의 평화를 넘어 작은 평화, 일상의 평화로서 보다 세밀화되고 내재화된 평화관념, 즉 '생명의 정치'로 인간의 삶에 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평화, 개발협력, 생명 정치,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 영문

International politics is strongly linked to human violenc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it has highlighted a non-violence politics such as prevention and healing while the study traditionally focused on political domination and violenc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first explores the history of peace conceptions — peace through God, peace by the people, peace in modern politics — and then maintains and elaborates the idea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through human security. In conclusion, I discuss that the conception of peace, even in political issues, should permeate into a little peace and peace in living as Bio-politics.

[Key words] Peace, Development-Cooperation, Bio-Politics, Giorgio Agamben, Homo Sacer



## 여론과 통일정책: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관 분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여론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첫째는, 통일에 대한 이념적 논쟁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으로 고착화된 남북한 대결구도 아래에서 통일정책과 대북 정책은 국가수반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고유영역처럼 생각되어왔다. 87년 민주항쟁 과정이 북한이라는 정권의 금기에 대한 정면 도전에서 시작한 것처럼 민주화 과정에서 북한과 통일은 민주화와 함께 여론의 관심을 받는 상징적 정책 분야가 되었다.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정치세력,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은 정부의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의 형성, 집행,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고 특히 북한에 대한 정부의 독자적인 교섭권은 통치권 차원에서 보장되었다(박선원 2002, 125). 한

국사회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엘리트는 물론 대중도 여론을 통해서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의견을 반영해왔다.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금에도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여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정치는 물론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이 특별하다. 서구사회가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 태도가 이념적으로 좌우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화해와 평화를 달성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보수진영은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이명박 정부 시기 개성공단에 8,696만 달러를 송금해, 노무현 정부 시기 4,131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반대논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정치 이론분야에서 시작된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다.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은 국제정치 연구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에 있어 현실주의의 입장은 여론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고 자유주의 시각은 여론의 긍정적 영향력을 옹호해왔다. 알몬드-리퍼먼의 논의(Almond-Lippmann consensus)에 따르면 여론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여론은 변화가 심하고 비합리적이다. 대중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추구라는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다. 둘째, 여론은 논리적 구조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관심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귀결되며 정보와 지식의 부족은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론의 특성은 변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론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 앞에서 논의한 여론의 특성의 연장선에서 여론의 판단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론의 주체인 대중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엘리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인 정치인 또는 엘리트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뜻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Cohen 1973).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1998년 후반에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을 우선 추구하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정부조사에 따르면 86.9%, 그리고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의 조사도 83.8%(박선원 2002, 128), 이듬해인 1999년에는 85%를 유지하였다.<sup>1)</sup>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76%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한겨레 2013년 6월 23일).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호혜주의에서 상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한반도의 군

---

1) 리서치 앤 리서치가 1999년 2월 26~27일 이틀에 걸쳐 남한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오차 범위는  $\pm 2.5\%$ 라고 밝혔다.

사적 긴장고조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여론 변화의 타당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과 정책 전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정책적 그리고 이론적 차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통일정책과 여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론

### 1. 통일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

현대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분적으로 국민투표, 주민소환, 국민발안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선택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문제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대중에 의한 대표의 선택과 교체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의제민주주의는 명목상으로 대중이 지배하고 대중을 대표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대중을 지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의한 대표의 교체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선출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표는 대중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출된 대표는 대중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Manin et al. 1999, 3-5). 민주주의 과정에서 대중에 의한 대표의 선택과 교체는 선거라는 정치제도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서 대표가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결정과정에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의 문제 또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정치과정에서 위임받은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과 같은 책임성 문제가 발생해도 위임자는 대리인을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고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론과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여론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전통적으로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여론이 가지는 취약점은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여론의 고유한 취약점으로 불명확성, 격분과 망각, 변덕성, 조작성, 간접성, 독단성, 감정성, 비과학성, 도피성, 보수성, 낮은 신뢰성, 다양성, 정치와 야합, 오염성과 같은 14가지의 특성을 들고 있다(홍득표 2004, 266-268).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민주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정책의 추진과정에 매년 또는 적어도 수년 이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라 통일 정책이나 대북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일수록 여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가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정책결정자들은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여론의 지지

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대북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는(박선원 2002, 135-166; 이정희 2002, 117-149;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151-174; 배한동 2009, 311-345; 서보혁 2010, 5-25) 국제정치와 외교 정책 연구의 경험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우리의 여론이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은 적절한 추론이지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념 성향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와의 상관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고 북한과 관련한 여론연구의 한계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문제점은 분석의 대상이 된 대북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보다는 단순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나 상관관계의 경우도 단순한 분산분석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 자료에 대한 구조방정식모델과 같은 정교한 방법론(sophisticated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델이라는 통계학의 한 방법론이 교육학(문은식 2012, 59-73) 그리고 경영학(옥정원 2012, 79-104) 분야와 같이 설문조사 자료를 주요 자료의 원천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이용되어왔으며, 정치학 분야에서는 여론조사와 관계가 깊은 선거연구에서 이용된 사례(강경태 2006, 165-189)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치학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분석은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를 수평적 및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이나 분산분석을 통해서 설명해왔다. 앞의 사전연구 검토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

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력, 거주지역, 이념 성향, 교육수준을 포함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였다(서보혁 2010, 14-16).

본 연구가 수행하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는 변수들 사이에 수직적·구조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개별적인 변수가 유사한 다른 변수들과 함께 하나 또는 복수의 상위 개념에 놓이게 되고, 그 개념(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또는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에 단일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상위개념 아래 설정된다. 이 변수는 다시 일련의 개별적인 변수로 구성된 개념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통일에 대한, 그리고 대북정책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게 된다. 종속변수도 하나의 단일적인 개별변수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원과 통일의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이다.

정치학에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구성하는 요인들 사이에 이런 구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Converse 1964, 207-261; Gamson 1992)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Lane 1973, 83-116)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념적 사고를 중시하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Markus 1974, 63-78; Neisser 1976)에 근거한다. 스키마 이론은 심리학 또는 인지과학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흩어진 정보의 조각을 지식의 패턴으로 조직하여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Brewer and Nakamura 1984, 119-160).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사건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은 과거의 반응이나 경험을 통해 축적

된 지식 또는 반응체계를 통해 인식, 판단, 대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지식의 체계가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치학 분야의 스키마 이론과 구조분석에 관련한 미국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Hurwitz and Peffley 1987, 1099-1120). 스키마 이론을 적용한 요인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여론은 외교정책을 파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인식하는데, 정보를 핵심 가치, 일반적 성향, 특정 이슈의 3층의 구조로 나누어 인식한다고 보았다. 핵심 가치는 특정한 행위에 연결되는 기본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전행위의 도덕성이나 인종중심주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 성향은 정부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주의, 반공사상, 그리고 고립주의를 의미한다. 끝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특정 이슈는 국방비 지출, 핵군비 통제, 군사적 개입, 대소련정책, 국제무역과 같은 특정정책 선호를 의미한다.

해외원조와 국내복지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Therien and Noel 2000, 151-162)에 따르면 16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국내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선호와, 종교적 성향이 사회주의 복지정책과 복지지출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에도 위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국제관계의 해외원조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좌파정당에 대한 선호가 해외원조에 대한 정책선호에 인지적 단초를 제공하면서 대중의 인식과 반응에 구조적 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라크 침공에 대한 지지여부에 대한 인식의 구조적 틀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론의 지지와 반대의 근거에는 인식의 구조적 틀이 있다는 주장이다(Lawrence 2004).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여론 지지의 지지에는 정당에 대한 선호와 이념적 선호가 자리 잡고 정당과 이념에 대한 선호가 대통령의 업무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비추어 여론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구조적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 2. 통일의식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론

국내 정치학계에서 수행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대부분이 단순한 여론의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를 활용한 설명에 그치거나 분석적인 경우에도 특정 설문의 선호에 대해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변수를 주요한 설명변인으로 선택한 교차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론의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가 대부분이었음에 반해, 본 연구는 ‘통일’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을 확인하고 통일과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개념에 있어서도 각각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을 확인한다.

나아가서 본 연구는 통일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 사이에는 구조적 인식의 틀이 존재하고 각각의 개념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이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분석과 논의를 전개한다. 통일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를 내생잠재변수(latent endogenous variable: 이하 내생변수)라고 하고, 통일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을 맺는 유관 개념은 외생잠재변수(latent exogenous variable: 이하 외생변수)라고 한

다. 잠재변수라고 하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관측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소개하는 각각의 관측변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사이에는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단선적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생변수와 관련된 외생변수들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구조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내생변수에 대해 여섯 가지의 외생변수가 구조적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내생변수는 ① 통일의 필요성, ② 통일에 대한 견해, ③ 통일의 가능시기, ④ 통일에 의한 집단의 이익, 그리고 ⑤ 통일에 의한 개인의 이익으로 다섯 가지의 관측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에서부터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견해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인데 4점 척도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 성숙을 기다려야 한다”, “현상유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구성된다. 적극론과 신중론의 두 가지 긍정적 응답과 “현상유지”라는 적극적인 반대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소극적 반대로 두 가지 부정적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는 통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전망이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에서부터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를 단위로 하는 경우와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대한 두 가지를 분리하여 관측하였다. 우선 집단이익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개인이익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매우 이익이 된다”에서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여섯 가지 잠재변수(latent factor)인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3) 탈북자에 대한 인식, (4) 통일 관련 주변국에 대한 인식, (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6) 개인 성향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스키마 이론을 포함하는 인간의 인식을 이념적 구조 아래 이해했는데, 전통적으로 좌-우 이념의 연속선이라는 단일구조에서 이해한 접근들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우월한 설명력과 간결성(parsimony)을 구비하고 있었다(Tomkins 1963, 388-411; Jost 2006, 651-670).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onover 1981, 617-645; Peffley and Hurwitz 1985, 871-890).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성하는 개인적 요소와 함께 통일의 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다섯 가지의 인식 요인들이 서로 연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이론적 차원에서(Lipset 1960)뿐 아니라 경험적 분석에(Benoit and Laver 2006, 134-135) 의해서도 논의되었다.

통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은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1) 북한에 대한 인식은 ①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 ② 북한에 대한 신뢰도, ③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④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⑤ 북핵의 위협으로 측정된다.

(2)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은 ① 대북정책의 만족도, ② 남북한 경험과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 ③ 남북한 경험과 비핵화 연계 가능성,

④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⑤ 한국의 핵무장 여부로 측정한다.

(3)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① 탈북자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 ② 탈북자의 수용정책, ③ 탈북자가 이질화 해소에 역할, ④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 ⑤ 탈북자로 인한 취업경쟁의 악화로 측정한다.

(4) 통일과 관련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① 통일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 필요성, ② 통일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협조 필요성, ③ 통일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 필요성, ④ 통일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 ⑤ 통일과정에 북중협력의 역할로 측정한다.

(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① 남한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 ② 남한사회에서 빈부격차의 심각도, ③ 남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 ④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의 정도, ⑤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에 의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6) 개인의 성향은 인구통계를 통해서 구성되었다. ① 개인의 교육수준, ② 상대적 소득수준, ③ 사회계층 자기 평가, ④ 정치적 성향, 그리고 ⑤ 정당지지로 측정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첨부 1>의 설문문항을 참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 중 북한과 직접 관련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고, 대외적 요인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성향이 포함된다.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외생잠재요인과 같은 하위개념이 통일이라는 종합적인 상위개념에 영향을 줄 때 이런 효과를 선형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하위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별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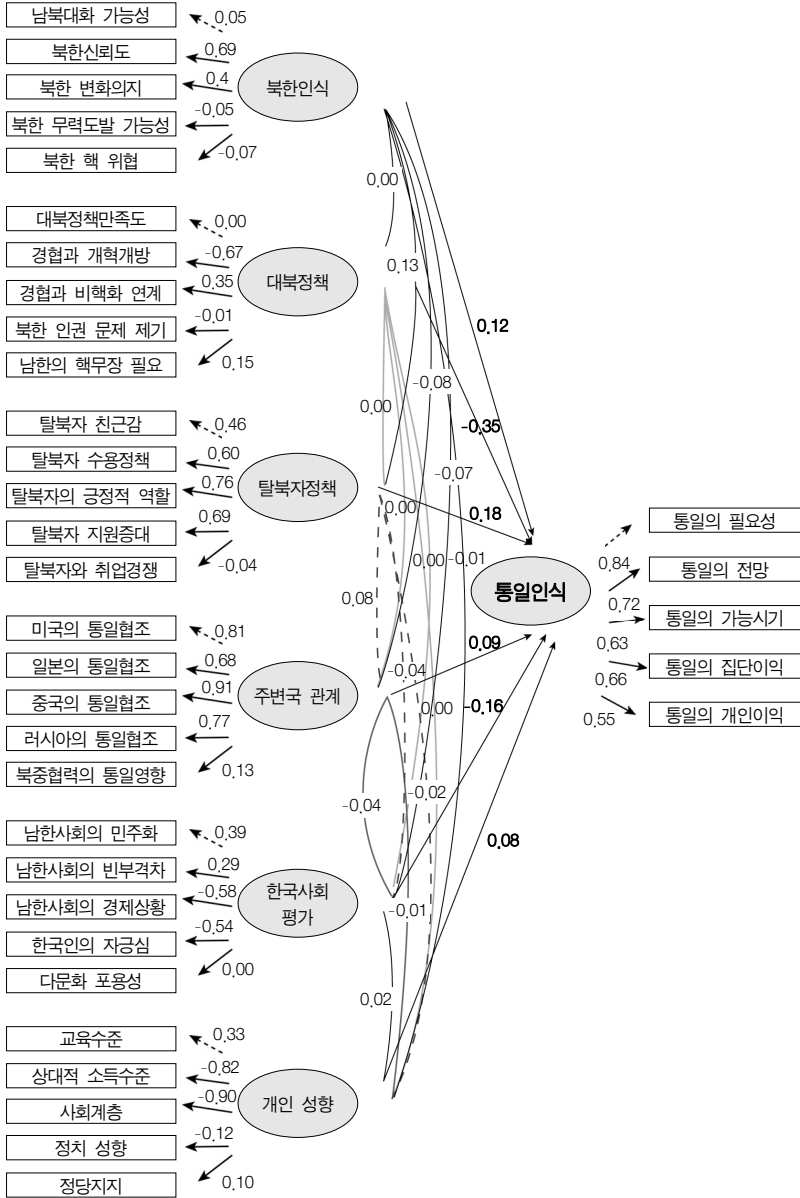
에 의해 추정되어야 한다(Jöreskog, Karl and Dag Sörbom 1996). 통일이라는 상위개념은 대북정책 요인, 외교적 요인, 국내정치적 및 개인적 요인 중 어느 분야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 응답자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평가를 할 때 고려했을 요인으로 ① 통일의 필요성, ② 통일에 대한 견해, ③ 통일의 가능시기, ④ 통일에 의한 집단의 이익, 그리고 ⑤ 통일에 의한 개인의 이익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ta = \gamma\xi + \zeta$$

구조방정식모델의 설정은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또는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조모델을 설정할 때, 모델에 포함되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xi(x_i)$ 는 외생변수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3) 탈북자에 대한 인식, (4) 통일 관련 주변국에 대한 인식, (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6) 개인 성향이라는 6개의 잠재변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eta(\eta)$ 는 내생변수인데, 응답자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gamma(\gamma)$ 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연결해주는 연계 계수이다.

외생변수는 항상 독립변수가 되는 것으로서 모델 내의 다른 변수에 의해 방향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이며, 내생잠재변수는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에 의해 방향적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종속변수이다. 내생잠재변수는 종속변수로 작용하지만 다른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

〈그림 1〉 2014 한국인의 통일인식 리즈럴 모델 경로도



는 독립변수가 되기도 한다. 내생변수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내생변수에는 오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러한 오차를 구조오차(structural error)라 한다. 이러한 오차는 일명 교란요인으로  $\zeta$ (zeta)로 표시하며 모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에러 요소를 나타낸다. 이들 각각의 잠재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요인'으로 통칭되는데 앞에서 논의한 내생관측변수(endogenous observed variables:  $y$ )와 외생관측변수(exogenous observed variables:  $x$ )에 의해서 측정된다.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특정한 다음에는 이들 변수 사이의 관계의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는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론이나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가설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모델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은 내생변수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모델(unidirectional model) 또는 재귀모델(recursive model) 이라고 한다. 모델에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연결하는 경로는 이론에 기초한 가설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의 가설을 제시한다. 이를 간략한 가설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H<sub>1</sub>: 북한에 대한 인식은 통일전망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다.
- H<sub>2</sub>: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통일전망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다.
- H<sub>3</sub>: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통일전망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다.
- H<sub>4</sub>: 통일과 관련한 주변국에 대한 평가는 통일전망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다.

H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통일전망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다.

H6: 개인적 성향은 통일전망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다.

### III. 분석결과 및 논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여론조사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언론기관에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부분적 여론조사에서부터 연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박선원 2002, 128), 통일과 관련한 주제에 체계적으로 여론조사 자료를 다년간 체계적으로 축적해온 경우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자료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선택하였다. 전국의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인구현황에 기초하였고, 조사표본을 지역, 연령, 성별로 배분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을 추출하여 유효표본 1,200명을 조사하였다. 이 여론조사 자료는 최대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  $\pm 2.8\%$  이내이다.

여론조사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데 반해서 적어도 국내 학계에서 자료의 분석은 대부분이 기술통계 차원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국내

와 달리 미국의 학계에서는 설문자료에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학적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1970년대 스웨덴의 칼 올레스콧(Karl Jöreskog)과 대그 솔봄(Dag Sörbom)이 리즈털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 교육학, 심리학을 시작으로 정치학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델은 사회과학에서 개발된 측정이론에 토대를 둔 확인적 요인분석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모델에 기초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성격을 갖는 방법론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관련성에 관한 것이고, 구조모델은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의 성격이 반영된 인과성에 관한 것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은 단일의 방정식이 아니라 다수의 방정식을 동시에 분석하여 여론조사로 수집된 자료가 현실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구조방정식모델에 사용하는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은 확인적 전략(strictly confirmatory strategy), 경쟁모델 전략(competing model strategy), 그리고 모델 생성전략(model generating strategy)의 세 가지로 나뉜다(배병렬 2006, 98-99).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는 확인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쟁모델 전략이나 모델 생성전략과 같이 복수의 모델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단일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따랐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연구자는 관계의 설정과 개념의 상호관계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 통계학에 기초한 방법론적 논의에 우선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에서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논의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설계한 연구모델(research model)을 수립하고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은 중요한 방법론적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적용하기 위해서 리즈렐(LISREL 8.8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여론조사 변수들은 모두 서열측정(ordinal measurement)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폴리카릭(polychoric) 상관이 적절하여 가중최소제곱(WLS: Weighted Least Square)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론조사 자료에 흔히 사용되는 이변량분석(bivariate analysis)과 회귀분석의 일종인 이변량 로짓/프로빗 모델(binomial logit/probit model) 또는 다변량 로짓/프로빗 모델(multinomial logit/probit model) 혹은 서열 로짓/프로빗 모델(ordinal logit/probit model)이 분석적이라기보다 기술적(descriptive)이거나 분석적이라고 하더라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 수평적인 표면적 관계에 중점을 두어 변수들 간에 내재하는 구조적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 1. 모델의 적합성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의하기 전에 모델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정한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리즈렐이 제시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chi^2 = 4111.9(p=0.0)$ 으로  $\chi^2$ 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의 적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chi^2$ 값이 작고 확률 값(p)이 크면( $p > 0.10$ )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chi^2$ 값이 크고 확률 값(p)이 작으면( $p < 0.10$ )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p=0.05$  이상일 때 모델의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ollen 1989; 배병렬 2006).  $\chi^2$ 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였는데(Bentler 1990, 82-91; Kaplan 1990, 137-155), 중심  $\chi^2$  통계량(central  $\chi^2$  statistic)으로  $\chi^2$ 를 사용하는 것은 모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 것이지만 이 가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T 통계 값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효하기 때문에 작은 표본크기에서는  $\chi^2$ 에 의한 모델의 평가가 올바르게 할 수 있고 표본크기가 큰 경우에는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델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가정은 모집단을 근사하게 대표하는 모델을 표본 크기가 큰 경우에 기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가 근사오차평균자승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다(Steiger 1990, 173-180; Browne and Cudeck 1993, 136-162). 이 값이 0.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0.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0.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하였다(Steiger 1990, 179-181). 본 연구에서 RMSEA는 0.079로 나왔는데 적절하게 수립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0.08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Callum, Browne and Sugawara 1996, 130-149). 모델적합도지수(GFI: Goodness-of-Fit Index)와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고려한 수정적합도지수(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는 각각

〈표 1〉 2010 한국인의 통일의식 리즈럴 모델 분석결과

		외생요인 ( $\xi$ )				
		북한인식	대북정책	탈북자	주변국	한국사회 개인성향
1) 변수(x)						
남북대화 가능성	( $\lambda_{(s)1,1}$ )	0.85				
북한신뢰도	( $\lambda_{(s)2,1}$ )	0.69				
변화의지	( $\lambda_{(s)3,1}$ )	0.40				
무력도발 가능성	( $\lambda_{(s)4,1}$ )	-0.05				
북핵위협	( $\lambda_{(s)5,1}$ )	-0.07				
대북정책만족도	( $\lambda_{(s)6,2}$ )	0.00				
경협과 개혁개방	( $\lambda_{(s)7,2}$ )	-0.67				
경협과 비핵화 연계	( $\lambda_{(s)8,2}$ )	0.35				
북한 인권 문제 제기	( $\lambda_{(s)9,2}$ )	-0.01				
핵무장에 대한 의견	( $\lambda_{(s)10,2}$ )	0.15				
탈북자 친근감	( $\lambda_{(s)11,3}$ )			0.46		
탈북자 수용정책	( $\lambda_{(s)12,3}$ )			0.60		
이질감 해소	( $\lambda_{(s)13,3}$ )			0.76		
지원증대	( $\lambda_{(s)14,3}$ )			0.69		
취업경쟁	( $\lambda_{(s)15,3}$ )			-0.04		
미국의 통일협조	( $\lambda_{(s)16,4}$ )				0.81	
일본의 통일협조	( $\lambda_{(s)17,4}$ )				0.68	
중국의 통일협조	( $\lambda_{(s)18,4}$ )				0.91	
러시아의 통일협조	( $\lambda_{(s)19,4}$ )				0.77	
북중협력	( $\lambda_{(s)20,4}$ )				0.13	
남한사회의 민주화	( $\lambda_{(s)21,5}$ )					0.39
남한의 빈부격차	( $\lambda_{(s)22,5}$ )					0.29
남한의 경제상황	( $\lambda_{(s)23,5}$ )					-0.58
한국인의 자긍심	( $\lambda_{(s)24,5}$ )					-0.54
다문화 포용성	( $\lambda_{(s)25,5}$ )					0.00
교육수준	( $\lambda_{(s)26,6}$ )					0.33
상대적 소득수준	( $\lambda_{(s)27,6}$ )					-0.82
사회계층	( $\lambda_{(s)28,6}$ )					-0.90
정치성향	( $\lambda_{(s)29,6}$ )					-0.12
정당지지	( $\lambda_{(s)30,6}$ )					0.10

2) 감마( $\gamma$ )	북한인식	대북정책	탈북자	주변국	한국사회	개인성향
통일	0.12	-0.35	0.18	0.09	-0.16	0.08
3) 외생요인공분산( $\varphi$ )						
북한인식×대북정책 ( $\varphi_{1,2}$ )	0.00					
북한인식×탈북자 ( $\varphi_{1,3}$ )	0.13					
북한인식×주변국 ( $\varphi_{1,4}$ )	-0.08					
북한인식×한국사회 ( $\varphi_{1,5}$ )	-0.07					
북한인식×개인성향 ( $\varphi_{1,6}$ )	-0.01					
대북정책×탈북자 ( $\varphi_{2,3}$ )	0.00					
대북정책×주변국 ( $\varphi_{2,4}$ )	0.00					
대북정책×한국사회 ( $\varphi_{2,5}$ )	0.00					
대북정책×개인성향 ( $\varphi_{2,6}$ )	0.00					
탈북자×주변국 ( $\varphi_{3,4}$ )	0.08					
탈북자×한국사회 ( $\varphi_{3,5}$ )	-0.04					
탈북자×개인성향 ( $\varphi_{3,6}$ )	-0.02					
주변국×한국사회 ( $\varphi_{4,5}$ )	-0.04					
주변국×개인성향 ( $\varphi_{4,6}$ )	-0.01					
한국사회×개인성향 ( $\varphi_{5,6}$ )	0.02					
4) 변수( $\lambda$ )						
통일의 필요성 ( $\lambda_{(s)1,1}$ )	0.84					
통일에 대한 견해 ( $\lambda_{(s)2,1}$ )	0.72					
통일의 가능시기 ( $\lambda_{(s)3,1}$ )	0.63					
통일의 집단이익 ( $\lambda_{(s)4,1}$ )	0.66					
통일의 개인이익 ( $\lambda_{(s)5,1}$ )	0.55					

참조: 구조 분석에서는 외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들은 X, 내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Y로 정리하였다. 괄호 안의 값은 해당계수의 t값을 나타내며, t값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단위조정을 위해 계수로 임의로 1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Goodness of Fit Statistics

Degrees of Freedom=539

Minimum Fit Function Chi-Square=4111.94(P=0.0)

Normal Theory Weighted Least Squares Chi-Square=4516.26(P=0.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0.079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0.077; 0.081)

P-Value for Test of Close Fit(RMSEA < 0.05)=0.00

Goodness of Fit Index(GFI)=0.8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0.79

0.82와 0.79를 얻었는데, 0이 최하의 수준이며 1이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Jöreskog and Sörbom 1993; Jöreskog and Sörbom 1996). GFI의 경우 제안한 모델의 적합도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Herting and Costner 1985, 321-393). 위에서 논의한 3가지의 모델 적합성에 대한 기준지표를 통해 평가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은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과 도표에 나타난 36개 지표의 계수의 t값이 유의수준  $\alpha=0.05$  또는 그 이하라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

위에서 제시한 <표 1>에 따르면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판단과 남북관계와 국내정치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대한 판단 사이에 개념적인 위계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0개의 관측변수들은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대북정책 평가, (3) 탈북자에 대한 평가, (4) 주변국에 대한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6) 개인 성향의 외생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외생요인은 직접 측정된 30개의 관측변수들 사이에 개념적 유사성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판단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도출하였다. 방법론적으로 외생요인과 관측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으로 나타나며, 그 관계의 적절성은 t값으로 나타난다. 개별 관측변수의 부하량이 높고 t값이 유의미한 경우에 해당 관측변수를 통한 외생요인

의 개념은 잘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을 실시할 때, 개념변수의 측정단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1개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에 기본값으로 “1”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값을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표 1>의 외생요인에 관련된 첫 번째 측정변수에 t값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림 1>의 경로도에 요인부하관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표와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변수들 간 상대적 수치로 계산되어 있다.

### 1) 내생변수

통일인식에 대한 다양한 잠재변수들 사이의 위계구조를 상정한 모델의 개념의 흐름은 <그림 1> 한국인의 통일인식 리즈럴 모델 경로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내생변수인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 필요성(0.84), 통일의 전망(0.72), 통일 가능시기(0.63), 통일의 집단이익(0.66), 그리고 통일의 개인이익(0.55)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전체 구조방정식모델에서 관측변수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관측변수들에 의해서 조사된 항목을 통하여 통일에 대하여 여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언급한 관측변수들에 의한 상위개념인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일에 관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관해서는 2~30년 이상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보다는 5년에서 10년 이내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통일이 가

져다주는 이익과 관련해서 한국사회는 통일이 국가적 차원의 집단이익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민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통일을 통한 개인적 차원의 이익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이익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생변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모델에 포함된 여섯 가지 외생요인에 관련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대부분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0.05), “북한 핵 위협”(-0.07), “대북정책 만족도”(0.00), “북한 인권 문제 제기”(-0.01) 그리고 “다문화 포용성”(0.00)으로 관련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변국 관계”는 모두 상당히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관계의 평가는 잘 측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표 1>의 내용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로도로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상관관계 그리고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인식」은 남북한 대화 가능성(0.05), 북한에 대한 신뢰도(0.69), 북한의 변화의지(0.4),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0.05), 그리고 북한 핵의 위협(-0.07)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로 측정하였다. 관측변수 중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북한의 변화의지와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뒤를 이었다. 북한 핵의 위협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요인부하량의 절댓값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음수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인식에 대한 여론반응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음에 반해서 무력도발 가능성이나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인부하량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절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 인식」이 작용하는 방향은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0.00), 경제협력과 개혁개방의 연계(-0.67), 경제협력과 비핵화의 연계(0.35), 북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0.01),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0.15)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관측변수 중에서 대북정책 만족도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제기는 음의 요인부하량이지만 영향이 실제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고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경제협력과 개혁개방의 연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요인부하(-0.67)를 보이는 반면에, 경제협력과 북한 비핵화의 연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부하(0.35)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대중의 인식 속에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대한 신호는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반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결과를 평가하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개방의 가능성보다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한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요인부하량이 상당한 수준(0.15)으로 나온 점도 이러한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 대응해야 하는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우리도 북한의 핵에 상응하는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우선 대응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탈북자정책」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0.46), 탈북자의 수용정책에 대한 인식(0.60), 탈북자가 남북 이질감 해소에 역할(0.76),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확대(0.69), 그리고 탈북자로 인한 취업경쟁의 격화(-0.04)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정책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가장 일관되고 영향이 실제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가장 적은 관측변수가 탈북자로 인한 취업경쟁의 격화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는 그 영향이 미미하며 다른 관측변수들이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묻는 질문인 데 반해 탈북자와 취업경쟁은 탈북자에 대한 경쟁적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의 긍정적인 관측변수에는 양의 부하량이 그리고 부정적인 관측변수에는 음의 부하량이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일관된 분석결과이다.

이들 관측변수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이 큰 것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질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탈북자들이 실제 남북통일 이전에 북한과 이질감을 극복하는 이른바 ‘작은 통일’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에 대하여 남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선호하고 있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탈북자의 수용에 있어서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수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이 가장 낮은 탈북자에 대한 친근함은 다른 관측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없고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주변국 관계」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는데 미국의 협조(0.81), 일본의 협조(0.68), 중국의 협조(0.91), 러시아의 협조(0.77), 그리고 북중협력관계(0.13)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에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평가는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주변국과의 협조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과의 협력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중국의 협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다음 미국의 협조와 러시아의 협조를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협조를 주변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관계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높은 여론의 관심을 받는 것은,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의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영향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에 관해서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객관적인 국력의 측면에서도 상대적 열세에 있고 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이지 않은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요인부하량 기준으로 러시아가 일본에 비해 더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일본에 비해서 경제적 및 외교적으로 명확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독도와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한국의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이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부합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관측변수로, 북중협력의 통일에 대한 영향은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직접적인 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론은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

를 공급함으로써 북한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 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역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의 평가」는 남한사회의 민주화(0.39), 남한사회의 빈부격차(0.29), 남한의 경제상황(-0.58), 한국인으로서 자부심(-0.54),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0.00)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요인부하량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잠재변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 한국의 경제상황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의 민주주의가 극복되고 빈부격차의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남한사회가 성숙된 민주주의와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수록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경제상황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의 요인부하량은 음수가 나왔는데 우선 경제상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기반으로 독일이 통일된 후 20년간 3,000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했고 현재도 구 동독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였다. 독일을 사례를 비추어볼 때, 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남북한 통일 비용 추산액

은 대략 1,000~4,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통일 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최소 1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10년간 525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보여주는 요인부하량이 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어렵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 관측변수로,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은 실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는 귀화한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 이주해온 두 종류의 이방인인 다문화 귀화외국인과 탈북자를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개인 성향」은 교육수준(0.33), 상대적 소득수준(-0.82), 사회계층(-0.90), 정치 성향(-0.12), 그리고 정당지지(0.10)의 다섯 가지 관측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개인 성향은 다른 설문과 달리 선호와 비선호의 5점 서열측정이 아니라 점에서 구조방정식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가능한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인 성향을 분석에 포함한 것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정치 성향, 정당지지 성향은 일관성이 있다는 기존의 정치학적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당지지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개인 성향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음의 값과 양의 값으로 교차되면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보수정당을 지지할수록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득력이 있다. 보수정당이 집권한 이명박·박

근혜 정부는 통일을 선호하는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상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사회계층에서 상위계층의 경우, 정치 성향이 진보적, 그리고 정당지지가 보수정당지지로 교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상대적 소득수준, 사회계층, 그리고 정치 성향은 음의 값을, 정당지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실은 전통적인 이해와 일관된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계층에서도 상위층을 구성하며, 정치·이념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정당지지도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내생 및 외생변수 상관계수

다음으로, <표 1>의 2)에 나타난 여섯 가지 잠재요인이 상위의 잠재요인인 「통일 인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1>에 나타난 감마( $\gamma$ ) 지수에 따르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0.35)가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탈북자에 대한 평가」(0.18),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0.16), 「북한에 대한 인식」(0.12)으로 나타났고 「주변국에 대한 평가」(0.09) 그리고 「개인 성향」(0.08)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북정책은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앞의 가설에서 제시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개혁개방을 연계하는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비핵화를 연계하는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대북정책 전체가 통일인식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도 통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와 변화의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국사회의 정치 및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연계로 생각할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한 평가와 개인 성향은 통일인식에 대해서 가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서 가설을 충분히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통일인식에 그다지 높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통일 문제는 남한사회 내부의 역량이나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논리적 설명을 개인 성향에 적용한다면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지지 또는 사회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범국가적 정책의제로 생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위에서 제시한 가설에서 내생잠재변수와 외생

잠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만이 통일인식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설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머지 가설의 경우 주변국 관계와 개인 성향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모두 가설과 일관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외생 공분산

다음으로 <표 1>의 3)에 제시되어 있는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외생요인 공분산( $\varphi$ )은 높은 값을 얻을수록 잠재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함축적이며 구조적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대북정책 평가, (3) 탈북자에 대한 평가, (4) 주변국에 대한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6) 개인 성향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6가지 잠재요인 사이에 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어떤 잠재적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평가」(0.13)는 사실상 유일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탈북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북한에 대한 인식」과 「주변국에 대한 평가」(-0.08),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0.07), 「북한에 대한 인식」과 「개인 성향」(-0.01)로 낮게 나타났는데,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탈북자에 대한 평가」와 「주변국에 대한 평가」(0.08), 「탈북자에 대한 평가」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0.04), 「탈북자에 대한 평가」와 「개인 성향」(-0.02), 「주변국에 대한 평가」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0.04), 「주변국에 대한 평가」와 「개인 성향」(-0.01)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인 성향」(0.02)로 나타나 잠재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IV. 결론: 여론과 통일의 상관관계

여론과 정책의 상관성에 대한 고전적 논의인 알몬드-리퍼먼(Almond-Lippmann) 논의에서 여론은 정보가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론의 취약성에 대한 고전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남한과 북한을 합하여 한민족 전체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응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론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여론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여론조사를 추적하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57% 수준에 그치다가, 1999년이 되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북한의 비핵화 우선을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는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여론의 76%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론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여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론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본 연구는 두 요인 사이의 체계적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제의를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의식에 대한 국내여론의 평가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다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하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하는 것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여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보다는 강경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자정책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통일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와 친근감을 느끼며 탈북자 수용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식을 하고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들이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며 탈북자들이 남한 주민의 취업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탈북자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것

이 통일인식의 제고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식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통한 변화의지를 보여주고 신뢰도를 높이며 이 과정에 대남 무력도발의 가능성과 핵에 의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넷째, 주변국 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모두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국가별 정도에 있어서는 현재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순서로 한반도의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가 채택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안에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지만, 대북 경제제재에 있어서는 북한의 무기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택하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는 입장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이며, 이를 한국의 여론이 인지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 성향은 통일인식에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향에 대한 측정을 구조방정식모델에 포함시키는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성향으로 자유주의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개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구성하는 변수가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논의를 검정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및 사회계층은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 성향과 정당지지도 진보와 보수의 연속선에서 측정하였지만 그 결과는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1〉 설문조사 내용

본 설문지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자료로 표본의 수는 1,200명이고 조사일은 2014년 7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개별 설문항목의 변수명은 본 연구에서 새로 설정하였다.

Y 변수에 해당되는 통일인식에 관련된 관측요인의 설문은 다음과 같다.

### 통일인식

- Y01.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 3. 반반/그저 그렇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99. 무응답       |
- Y02.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99. 무응답
- Y03. 통일시기: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3. 20년 이내 |
| 4. 30년 이내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
| 99. 무응답   |           |           |

Y04. 통일의 집단이익: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99. 무응답

Y05. 통일의 개인이익: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99. 무응답

X 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인식, 대북정책 인식, 탈북자 인식, 주변국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개인 성향의 6가지 잠재변수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에 대한 인식

A01: 북한대화 가능성: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다
99. 무응답

A02: 북한정권 통일의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다
99. 무응답

A03: 북한의 변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99. 무응답

A04: 무력도발 가능성: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99. 무응답

A05: 북핵 위협: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99. 무응답

## II. 대북정책 인식

A06: 대북정책 만족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99. 무응답

A07: 남북경협과 개혁개방: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99. 무응답

A08: 경험과 비핵화 연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1.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3. 반반/그저 그렇다
-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99. 무응답

A09: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 1.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3. 반반/그저 그렇다
-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99. 무응답

A10: 핵무장 의견: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 1.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3. 반반/그저 그렇다
-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99. 무응답

**III. 탈북자 인식**

A11: 탈북자 친근감: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99. 무응답

A12: 탈북자 수용정책: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 2. 원하는 사람 중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99. 무응답

A13: 이질화 해소: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 1. 매우 동의함                      2. 다소 동의함                      3. 별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99. 무응답

A14: 지원증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 1. 매우 동의함                      2. 다소 동의함                      3. 별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99. 무응답

A15: 취업경쟁: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매우 동의함
  2. 다소 동의함
  3. 별로 동의하지 않음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99. 무응답

#### IV. 통일 관련 주변국가에 대한 인식

A16: 통일협조 필요성-미국: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9. 무응답

A17: 통일협조 필요성-일본: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9. 무응답

A18: 통일협조 필요성-중국: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9. 무응답

A19: 통일협조 필요성-러시아: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9. 무응답

A20: 북중협력: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우려스럽다 | 2. 조금 우려스럽다  |
| 3. 별로 상관없다  | 4. 대체로 바람직하다 |
| 5. 매우 바람직하다 | 99. 무응답      |

#### V.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A21: 남한사회 민주화: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1. 매우 비민주적 |   |   |   |   |   |   | 10. 매우 민주적 |

A22: 사회 문제 빈부격차: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부격차

- |          |          |          |
|----------|----------|----------|
| 1. 크게 개선 | 2. 약간 개선 | 3. 차이 없음 |
| 4. 약간 악화 | 5. 크게 악화 | 99. 무응답  |

A23: 경제상황: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 |           |          |           |
|-----------|----------|-----------|
| 1. 매우 만족  | 2. 다소 만족 | 3. 다소 불만족 |
| 4. 매우 불만족 | 99. 무응답  |           |

A24: 한국인 자긍심: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자랑스럽다    | 2. 다소 자랑스럽다    |
|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 99. 무응답        |                |

A25: 다문화 포용성: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 |          |          |              |
|----------|----------|--------------|
| 1. 매우 찬성 | 2. 다소 찬성 | 3. 반반/그저 그렇다 |
| 4. 다소 반대 | 5. 매우 반대 | 99. 무응답      |

## VI. 개인 성향

A26: 교육수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이상
99. 무응답

A27: 상대적 소득수준: 한국의 일반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택의 소득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99. 무응답

A28: 사회계층: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99. 무응답

A29: 정치 성향: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99. 무응답

A30: 정당지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통합진보당
  4. 정의당
  5. 지지정당 없음
99. 무응답

## ■ 참고문헌 ■

- 강경태. 2006. “리즈렐(LISREL)모델을 통한 17대 한국 총선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3호. pp.165-189.
- 김귀옥. 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문화, 시민사회.”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pp.67-102.
-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 pp.151-174.
- 남궁곤. 1999.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Lippmann Consensus’와 그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1호. pp.31-64.
- 문은식.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적 환경, 동기적 신념, 인지적, 행동적 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제21집 2호. pp.59-73.
- 박명규·김병로·송영훈·정은미·장용석. 2013. 『201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선원. 2002.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pp.135-166.
-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이해, 활용 및 프로그래밍』.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한동. 2009. “한국의 통일 관련 NGO의 역할 평가와 과제 설정.” 『대한정치학회보』 제17집 2호. pp.311-345.

- 서보혁. 2010. “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북통일 정책의 과제와 전망.” 『북한학연구』 제6권 2호. pp.5-25.
- 옥정원. 2012. “스포츠마케팅에 있어 팀 동일시에 대한 재해석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제17권 1호. pp.79-104.
- 이영훈. 2012.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pp.267-291.
- 이정희. 2002.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pp.117-149.
- 홍득표. 2004. 『현대정치과정의 이해』. 서울: 학문사.

- Benoit K., and M. Laver. 2006. *Party Policy in Modern Democracies*. London: Routledge.
- Bentler, P. M. 1990. “Rites, Wrong, and Gold in Model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7, No.1. pp.82-91.
- Bollen, Kenneth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rewer, William F., and Gleen V. Nakamura. 1984.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chemas.”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1. Hillsdale, NJ: Erlbaum. pp.119-160.
- Browne, M. 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pp.136-162.
- Cohen, Bernard C. 1973. *The Public's Impact on Foreign Policy*. Boston, MA: Little Brown.
- Conover, P. J., and S. Feldman.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5. pp.617-645.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 Press, pp.207-261.
- Gamson, William A.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ting, J. R., and H. L. Costner. 1985. "Respecification in Multiple Indicator Models." In H. M. Blalock, eds. *Causal Models in the Social Science*. New York, NY: Aldine. pp.321-393.
- Hurwitz, Jon, and Mark Peffley. 1987. "How Are Foreign Policy Attitudes Structured? A Hierarchical Mod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1, No.4. pp.1099-1120.
- Jöreskog, Karl, and Dag Sörbom. 199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_\_\_\_\_. 1996. *LISREL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Jost, T. John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y*, Vol.61. pp.651-670.
- Kaplan, D. 1990. "Evaluating and Modifying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5. pp.137-155.
- Lane, Robert E. 1973. "Patterns of Political Belief." Jeane Knutson, e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pp.83-116.
- Lawrence, Christopher N. 2004. "Iraq, 9/11, and the Ward Understanding Mass Belief in the Perceived Threat of Saddam Hussein and Support of War."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 Lipset, Samuel M. 1960. *Political Man*. Garden City, NY: Doubleday.
- MacCallum, R. C., M. W. Browne, and H. M. Sugawara.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Vol.1. pp.130-149.

- Manin, Bernard, Adam Przeworski, and Susan C. Stokes. 1999. "Introduction" Adam Przeworski, Susan C. Stokes and Bernard Manin, 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6.
- Markus, Hazel. 1974. "Self-Schemata and Procession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5. pp.63-78.
- Neisser, Ulric. 1976. *Cognition and Reality: Principles and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Peffley, Mark A., and Jon Hurwitz. 1985. "A hierarchical model of attitude constrai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9. pp.871-890.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5. pp.173-180.
- Therien, Jean-Philippe, and Alain Noel. 2000. "Political Parties and Foreign Ai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4, No.1. pp. 151-162.
- Tomkins, SS. 1963. "Left and right: a basic dimension of ideology and personality." White R. W., eds. *The Study of Lives*. New York, NY: Atherton. pp.388-411.

## • 국문

본 연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 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인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전망,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집단이익, 통일의 개인이익으로 구성하였다. 외생 잠재요소는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대북정책 평가, (3) 탈북자에 대한 평가, (4) 주변국에 대한 평가, (5)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6) 개인 성향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형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조방정식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어]** 구조방정식모델, 통일인식, LISREL, 통일의 준비, 통일의 기대

- 영문

Based on schema theory that assumes hierarchical order among human perceptions, this paper employ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survey data.

Reunification as a latent endogenous variable is measured with the 5 endogenous observed variables: necessity, expectation, and timing, group interest, and personal interest of reunification. The latent exogenous variables are (1) understanding about North Korea, (2) evaluation for the policy on North Korea, (3) eval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4) evalu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5)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nd (6) personal preferences, which are measured with 15 observable variables. The statistical analys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nd that latent endogenous variables of reunification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aten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Although this paper is only an attempt to use the analytic approach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survey data will allow the analysts to understand the trend of public opinion on the reunification policy and to pursue a beneficial approach for North Korean issues.

[**Key words**] Structural Equation Model, Reunification Cognition, LISREL, Preparedness for Reunification, Expectation of Reunification

##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대 엘리트의 인식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평화협력연구부장

### I. 문제 제기

평화는 인간 누구에게나 소중한 보편적인 가치이다. 평화가 없으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더 명확하다. 무기가 발달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쟁과 테러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치르는 대가가 과거에 비해 더 커지고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류는 원자폭탄에서 팽풍 외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왔다. 지금도 군사력과 외교는 평화를 달성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력이나 외교는 제주평화연구원 같은 민간 평화연구소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수단이 아니다. 민간 평화연구소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이 평화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은 — 추상적이고 이상적(idealistic)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겠지만 — ‘인식의 변화’이다.

군사력과 외교가 국제관계에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식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처럼 국제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협력이 저해되고, 상대방에 대한 우호감이 증가하면 갈등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평화와 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자국과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것이나 여러 가지 공공외교사업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국제협력과 평화증진을 위해서 주변국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에서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이해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0년부터 꾸준히 평화와 협력에 관련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였다.

첫째는, 재정적인 것이다. 인식의 조사는 전통적으로 다수의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주평화연구원에 의한 자체적인 인식조사는 몇 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둘째는, 1국에 한정된 조사의 한계이다. 국제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당초의 계획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를 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대상을 주변국 국민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예산 문제를 떠나서도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다.

셋째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의 한계이다. 일반 국민들이 전보다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각을 아는 것보다 북한 고위권력자의 생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에 추가해서 엘리트의 인식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다.

## II.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와 제주포럼: 소개와 자료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자안보대화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었다. 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아태지역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였으며, 월남전과 같은 국제적 분쟁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 이후 냉전기의 양극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 질서를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고, 냉

전의 종식에 따른 긴장의 감소는 국가 간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작용도 하였다. 따라서 냉전의 종식을 기점으로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대화가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각국에서 수많은 다자안보대화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동북아평화협력 포럼’, ‘서울안보 대화’, ‘제주평화포럼(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등 다자안보대화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 1.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데이터베이스 (1997~2008)

냉전의 종식 이후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대화가 급증하자 이를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보고 역내 다자안보대화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노력도 같이 시작되었다.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前 Dialogue Monitor)” 데이터베이스는, 1994년부터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다자안보대화를 모니터링하여, 명칭, 주최자, 참가자, 장소, 일시, 주제(theme), 의제(agenda) 등을 기록한 방대한 자료이다.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약자로 DRM) 데이터베이스는 1994년 캐나다의 연구자들 — Paul Evans, Shirely Yue, 그리고 York대학과 British Columbia대학 연구팀 — 이 아태지역 다자대화 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1998년부터는 Paul Evans가 이끄는 British Columbia대학 연구팀과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가 공동으로 데이터 구축작업에 참여하다가, 이후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가 단독으로 작업하였고, 2008년을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 중단되었다. 2008년에 역내 다자안보대화의 모니터링이 중단된

이유에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역내 다자안보대화가 모니터링이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해진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DRM이 현재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DRM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DRM이 평화와 협력에 관련된 아태지역 정책결정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RM에는 총 2,802개 다자안보대화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802개의 다자안보대회는 정부 간 다자안보대화(Track 1)와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Track 2)를 모두 포함한다. 어떤 회의에 대해서는 이름, 주제, 날짜와 장소 등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수록되어 있지만, 어떤 회의에 대해서는 주최자, 참석자, 세부의제와 간략한 설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DRM은 아태지역 안보와 공동체에 관한 다자대화의 발전과 추이를 전 지역적으로 모니터링한 유일한 기록이다. 특히 모니터링이 시작된 시기가 아태지역에서 안보와 지역공동체에 관한 다자 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아태지역 안보와 공동체 담론의 발전과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다자 대화의 분석을 통해서 아태지역 안보와 공동체 담론의 발전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DRM은 필수적 자료이고, DRM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DRM에 포함된 대화의 수가 거의 3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개별 대화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DRM은 각각의 대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는 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대화를 개별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용도보다는 다자안보대화의 전반

적인 추세와 경향을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하다.

## 2.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2001년 시작되었다. 제주포럼에는 매년 정계, 관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왔다. 제1회 포럼부터 제5회 포럼은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고, 2011년 6회 포럼을 계기로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의 변경은 주제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명칭의 변경 이후 제주포럼에서는 평화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2012년 제7회 포럼부터 제주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연례 포럼으로 발전하였다. 2012년 제주포럼의 연례화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제주포럼은 격년제로 개최되었고 개최일지도 매년 가변적이었다.

매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제주평화연구원이 내부 협의와 외부 자문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련된 주제로 선정하고, 포럼에 참가하는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에게는 선정된 주제에 관하여 기초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기초연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연설자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주최 측이 기초연설자에게 특정한 내용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설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기초연설자 각자가 갖는 생각이 자유롭게 담기게 된다. 또 매 제주포럼에서는 수십 개의 개별 세션이 개최되는데, 일부의 세션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기획하지만 대다수의 세션에서는 포럼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각각 자기가 정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즉, 매년 열리는 포럼에는 그해에 포럼의 초점이 되는 대주제가 있고, 대주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조연설자와 세션 개최 기관과 단체가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관심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매 제주포럼이 끝나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주포럼은 단독유일한 행사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아태지역 내 무수한 안보대화 중의 하나이다. 제주포럼이 그간 11회나 개최되었고 세션의 수도 한 해에 60, 70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제주포럼을 통해서 역내 주요 정책결정자와 전문가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제주포럼의 결과자료(기조연설, 세션주제, 세션 논의 내용)를 통하여 아시아의 정책결정자와 민간전문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조연설자와 각 세션참여기관이 대주제와 관련하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기조연설과 세션의 주제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포럼의 결과자료는 아태지역 내 존재하는 생각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 III. 연구설계

DRM 데이터베이스는 1997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아태지역에서 개최된 2,802개의 다자안보대화를 기록한 중요한 자료로서, 이 연구에서는 준거(reference)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제주포럼의 논의 내용들이 DRM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역대 다자안보대화의 논의 내용들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1년을 계기로 제주포럼은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제 범위도 확장하였다. 따라서 2011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나누어서 제주포럼의 논의 내용을 DRM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파악된 역대 다자안보대화의 논의 내용들에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주포럼의 기조연설문의 분석을 통해서 같은 대주제에 대한 기조연설자들의 생각, 특히 다양성과 공통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2015년 포럼의 대주제는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였고, 2016년 포럼의 대주제는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었다.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은 각국의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이 신뢰와 화합, 신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힌 것은 기조연설자뿐만이 아니다. 2016년을 예로 들면 대주제인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에 대해서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현직 주한 대사들은 좌담회를 통해서, 학자들은 학술세션을 통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 결과,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 현직 외교관, 그리고 연구자라는 각기 다른 역할과 위상에 따라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결과자료집에는 또한 각 세션별로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세션의 경우는 발언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하여 하나로 요약하기도 하였지만, 대개의 경우는 발

언자별로 발표나 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다. 따라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적은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의 유사성과 상이성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주포럼이 아태지역 내 다른 다자안보대화와 비교해 갖는 공통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일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역할이나 국적에 따라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 그 반대로 역할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인식의 공통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각과 견해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국적에 의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DRM 데이터베이스나 제주포럼 결과자료집의 분석을 통해서도 개개인의 인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좀 더 상세한 후속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보다 정확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으로서 이 연구의 분석은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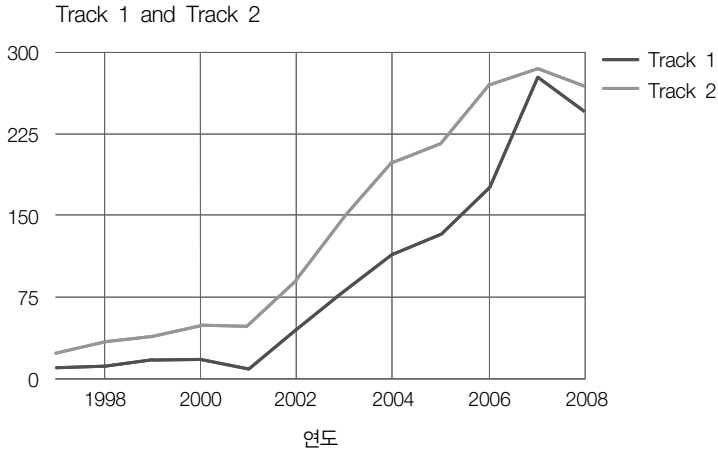
#### IV. DRM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다자안보대화의 추세와 의제<sup>1)</sup>

데이터가 공개된 1997년 하반기에서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에 가장

---

1) 이 부분은 필자의 기존 연구(“아태지역 안보대화의 평가와 의의: Track 2 다자안보대화를 중심으로,” 「JPI 연구보고서」, 2015)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다. 앞에서

〈그림 1〉 연도별 Track 1 대화 vs. Track 2 대화



\* 1997년의 경우는 하반기 6개월에만 해당하는 통계

눈에 띄는 특징은 디자인보대화의 폭발적 증가가 될 것이다. Track 1과 Track 2에서 디자인보대화는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 한 해 동안 Track 1 디자인보대화는 총 11회, Track 2 디자인보대화는 총 34회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1998~2008 기간 중에 Track 1 대화는 22.3배, Track 2 대화는 7.9배 증가하여 마지막으로 집계된 2008년에는 Track 1 대화가 245회, Track 2 대화가 269회로 비슷한 횟수로 개최되었다. 모든 연도에서 Track 2 대화가 Track 1 대화보다 많이 개최되었으나, 애초 시작할 때 Track 1 대화의 개최 횟수가

---

설명하였듯이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DB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필요성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내용을 이 글에서 다시 소개한다.

Track 2 대화 개최 횟수의 1/3 정도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증가율에 있어서는 Track 1 대화가 Track 2 대화를 앞지르고 있다.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의 증가가 실제로 대화 횟수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모니터링이 용이해진 탓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화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안보 개념도 다양화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 개념이 확장되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위협이 객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사이버 공격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이고, SARS 같은 전염병도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지 지금처럼 교통수단과 인적 왕래의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다른 나라와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런 객관적인 변화도 있지만 안보 개념의 변화와 확장도 중요하다. 군사안보 중심의 전통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보건, 환경, 성장,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도 비전통적 안보 문제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안보의 주체가 전통적인 '국가'에서 '인간'으로, 나아가 '지구(환경이나 기후변화의 경우)'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안보 개념의 확장과 다양화되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개최된 Track 2 다자안보대화의 대주제나 부주제(conference theme) 중에서 다음의 주제어가 얼마나 발견되는지 검색하여 보았다.<sup>2)</sup>

---

2)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의의 명칭에 나타난 주제(theme)만을 살펴본다. 예컨대 'WMD에 관한 CSCAP 연구반 회의'의 경우 WMD가 회의의 주제이다. '한-아세안 대화'처럼 회의주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의제(session topic)를 검색할 필요가 있는데, 세부의제의 경우 어떤 회의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회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이 부족하다.

▶ 검색 주제 (관련어 포함)

- 신뢰구축
- 대량살상무기/핵무기
- 테러
- 사이버안보
- 초국경(transnational) 범죄
- 인간안보
- 질병
- 재난
- 에너지
- 환경

신뢰구축이나 대량살상무기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관련된 주제어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전통적인 안보에 관련된 주제어이다. 다음은 검색결과가 있는 주제어들이다(괄호 안은 회의 개최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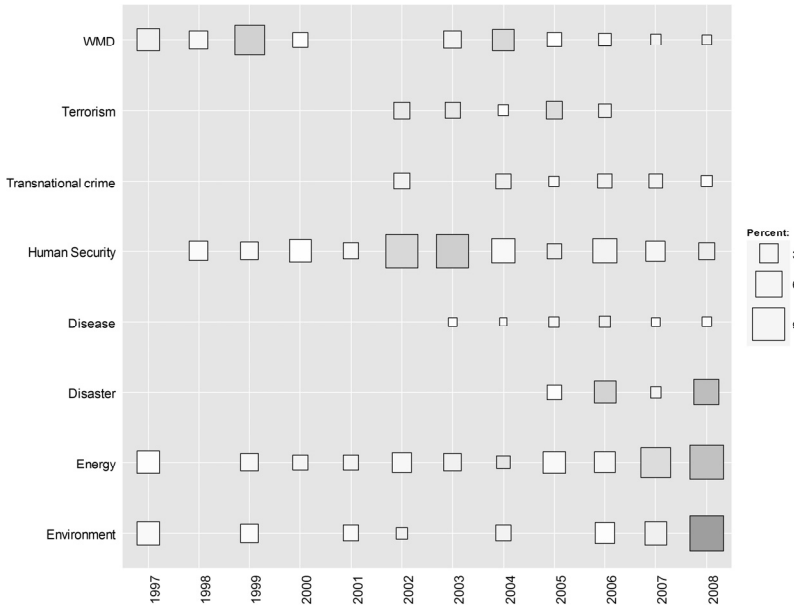
- 대량살상무기/핵무기(31)
- 테러(16)
- 초국경 범죄(21)
- 인간안보(67)
- 질병(11)
- 재난(32)
- 에너지(80)
- 환경(55)

\* 1997년 하반기~2008년까지 개최된 Track 2 대화는 총 1,670회

〈그림 2〉는 연도별로 검색된 주제어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 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비전통 안보 문제가 Track 2 다자대화의 주요관심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인간안보, 에너지, 환경이 인기 있는 주제였다. 2008년도의 경우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Track 2 대화가 각기 그해 개최된 전체 Track 2 대화의 10%에 근접하였다.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회의를 합하면 그해 개최된 회의의 20%에 근접하였다.) 놀랍게도 신뢰구축과 사이버안보에 관한 검색결과가 없었다. 사이버안보는 비교적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회의가 없었다

〈그림 2〉 연도별 해당주제 관련 Track 2 대화 개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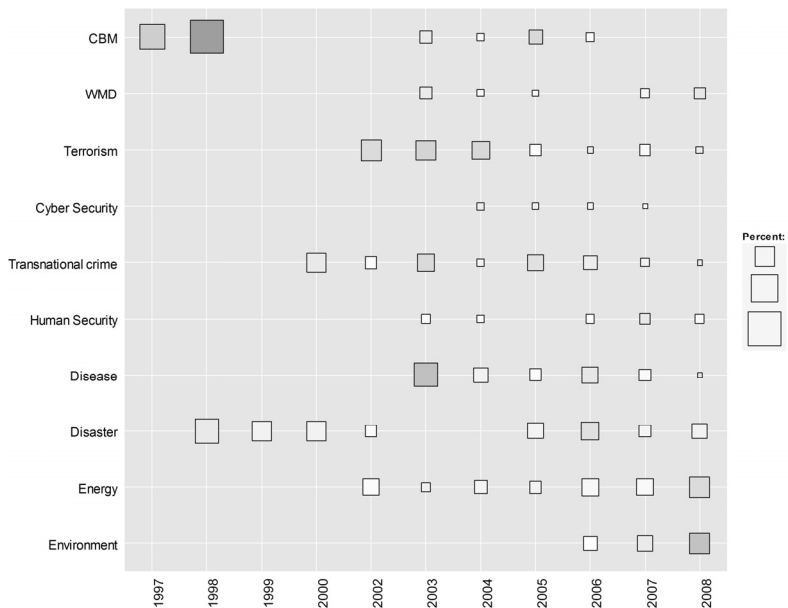
\* 해당 연도에 개최된 Track 2 대화 총수 대비 검색된 주제 관련 회의의 퍼센티지

고 하더라도, 신뢰구축에 관한 검색결과가 없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첫째, 신뢰구축이 이제는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하거나 더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Track 2 대화에서는 주제로 선정하지 않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Track 2 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개최된 Track 1 다자안보대화의 대주제나 부주제(conference theme)를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였다. <그림 3>은 연도별로 검색된 주제어에 관한 회의가 개최된 추이(퍼센티지는 당해 연도에 개최된 Track 1 대화 총수 대비 해당 주제 회의 개최횟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이다.

Track 2 대화에 대해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를 담은 차트에 비교해

<그림 3> 연도별 해당주제 관련 Track 1 대화 개최 추이



볼 때 차이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ack 2 대화에서 빠졌던 신뢰구축과 사이버안보가 논의되었다. 대량살상무기/핵무기나 테러리즘은 Track 1, Track 2에서 비슷하게 논의되었다. 둘째, 인간안보는 Track 2 대화에 비해 적게 논의된 반면, 질병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Track 1 대화에서 Track 2 대화보다 더 많이 논의되었다.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이유는 각국 정부는 아직도 전통적 안보 문제가 더 주된 관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난이나 질병에 대해서 Track 1 대화가 활발했던 이유는, 각국 정부에게 재난이나 질병은 정책적 대응을 요하는 긴급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는 Track 1 대화에서보다는 Track 2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V. 제주포럼의 대주제와 세션 의제

DRM(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중 ‘제주평화포럼(現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전신)’이 1회부터 4회까지 총 4번 열렸는데, DRM DB에는 3회(2005년)와 4회(2007년)만 기록되어 있다. 1, 2차 제주평화포럼은 신생 회의인데다가 이후 회의에 비해서 아직 국제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을 소지가 크다. 한편 5회 및 그 이후의 제주포럼은 DRM 프로젝트가 끝난 2008년 이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DRM D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럼 대주제를 보면 2007년까지는 Northeast Asia 내에 지역공동체

## 〈제주포럼 대주제〉

- 2001. Building Common Peace &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2003.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Challenges and New visions
- 2005.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Towards Peace and Prosperity
- 2007. Peace &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Exploring the European Experience
- 2009.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 2011. 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 2012.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 2013. New Waves in Asia
- 2014. Designing New Asia
- 2015.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 2016.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 2007년 이후 포럼부터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

\*\* 2011년부터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포럼화

\*\*\*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연례포럼화

를 건설하고 OSCE/CSCE 방식의 다자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2009년 이후는 지역적 범위가 아시아로 확대되었고, 종합포럼으로 변신한 이후로는 대주제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제주포럼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경영, 사회문화교육, 지역발전 등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제만을 보면 제주포럼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제주포럼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션 의제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제주포럼이 대형 종합포럼으로 성장한 이후 세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6년 포럼의 경우 총 69개 세션이 개최되었다.

## 1. ‘제주평화포럼’ 세션 제목(2007, 2009년)

〈표 1〉은 2007년, 2009년 개최된 제주포럼의 개별 세션 제목에 2번 이상 사용된 단어와 그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Asia와 Northeast가 각기 17회, 15회 사용되어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ooperation, Community, East가 각기 9회, 6회, 6회로 많았다. 한편 peace는 4회, security는 5회 사용되었고, nuclear, conflict, Korean이 각기 2회 사용되었다. 세션 제목에 사용된 단어만을 놓고 보면 제주포럼(당시는 제주평화포럼)이 핵 문제 외의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고 금융이라든가 브랜딩 같은 경제경영 이슈가 다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와 그 빈도의 분석만으로는 제주포럼의 관심이나 대략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초보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만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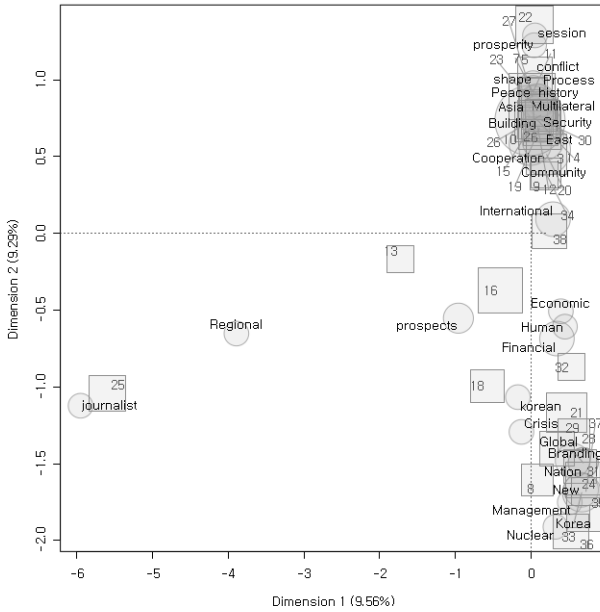
〈표 1〉

단어	총 빈도	단어	총 빈도
Asia	17	prospects	3
Northeast	15	Century	2
Cooperation	9	City	2
Community	6	Crisis	2
East	6	Economic	2

Building	5	Human	2
Future	5	Leaders	2
Jeju	5	Management	2
Korea	5	Nuclear	2
Security	5	Perspective	2
Asian	4	Politics	2
Financial	4	Process	2
Global	4	Regional	2
International	4	Roundtable	2
New	4	conflict	2
Peace	4	diplomat	2
history	4	journalist	2
Branding	3	korean	2
Multilateral	3	prosperity	2
Nation	3	roundtable	2
World	3	session	2
issue	3	shape	2

〈그림 4〉의 차트는 문서자료를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KH Coder를 사용해서 2007년과 2009년 세션 제목을 분석한 것이다. 통계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서 정량적 자료(quantitative data)의 분석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문서자료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기법도 발달하지 못하였고 분석할 자료도 풍부하지 않았었다. 최근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정성적 자료(qualitative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자료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문서자료 분석은 대량의 문서 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관심사안, 핵심 개념, 논리구조 등에 대한

〈그림 4〉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석이 “객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개연성도 높다.

세션 제목에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 차트에 따르면, 2007년과 2009년 제주포럼에서는 크게 2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다. 우선, 우측 상단부에는 multilateral, cooperation, community, building, peace, security, conflict, process 등의 단어들이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이 밀집하여 위치한 것은, 2007년과 2009년 제주포럼에서 다자안보협력과 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차트를 사용하여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한국 문제－branding, crisis, nuclear－가 제주포럼의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다. 밀집하여 있는 단어의 수가 적고, 단어와 단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먼 것을 보면, 2007년, 2009년 제주포럼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문제보다는 다자안보협력과 공동체 구축이 더 중요한 주제였고, 한국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핵 문제에서부터 국가브랜딩까지 다루면서 초점이 분산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DRM 자료를 통해서 안보 개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과 2009년 제주포럼의 경우에는, 제목에 사용된 단어와 빈도분석, 그리고 대응분석 차트를 통해서 볼 때 안보 개념의 다양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세션 제목에는 다자, 협력, 공동체, 구축, 평화, 안보, 갈등, 프로세스 등 전통적인 안보협력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중심이고, 환경, 테러, 인간안보, 전염병 등의 새로운 이슈는 세션 제목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비전통 안보 이슈들이 세션 중에 토의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비전통 안보 이슈를 세션 제목을 내걸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실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주포럼에서 한국 문제가 중요한 주제이라는 점이다. 제주포럼의 이러한 특징은 안보 개념의 다양화나 글로벌 이슈의 부상 등의 최근 추세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2007년, 2009년 제주포럼이 다른 포럼에 비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견지한 증거이기도 하다. 2007년, 2009년까지 제주포럼은 소규모 회의로서, 지역다자안보협력의 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선택과 집중”하는 다자안보대화였기 때문이다. 안보 개념의 다양화 등 이슈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제주포럼이 대화·종합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 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션 의제 (2015, 2016년)

2011년부터 제주포럼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69개 세션이 개최되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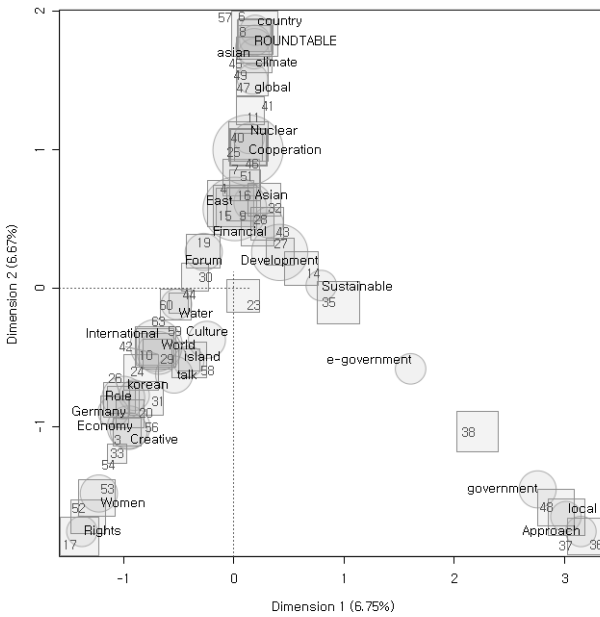
〈표 2〉는 2015년 포럼의 세션 제목에서 4회 이상 등장한 단어의 리스트이다. 2015년 포럼의 대주제가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이다. Asia가 최다 빈도의 단어이고, New가 3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이 대주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Trust는 5회 등장하였고, Harmony는 4회 이상 등장한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7년/2009년의 경우와 다른 한 특징은 China의 등장이다. 2007년/2009년의 경우 China는 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림 5〉는 2015년 세션 제목에 대해 대응분석을 한 것이다. 대형

〈표 2〉

단어	빈도	단어	빈도
Asia	19	Jeju	6
Cooperation	11	China	5
New	10	Future	5
East	9	Trust	5
Korea	8	Community	4
Northeast	8	Economic	4
Peace	8	Economy	4
Development	7	korean	4
challenge	6	Public	4
International	6	World	4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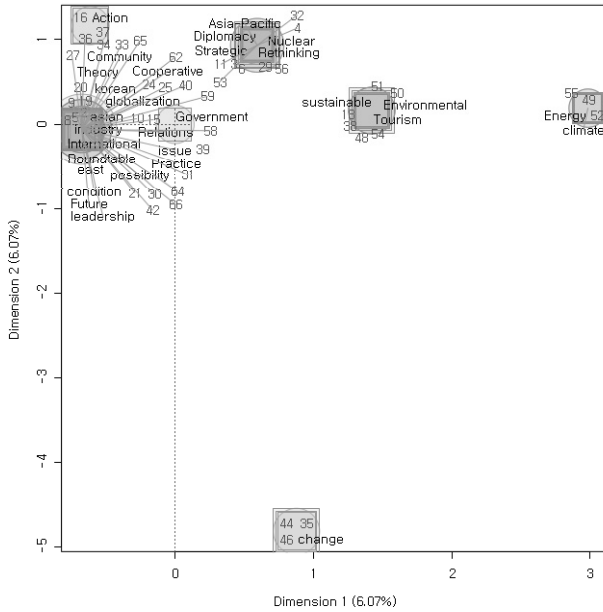
종합포럼답게 여권, 창조, 경제, 독일, 물, 문화, 섬, 지속가능성, 지방, 글로벌, 기후, 금융, 핵, 협력 등의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지역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전통 안보 이슈 중 테러, 인간안보, 전염병 등은 아직 세션 제목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기후, 지속가능성, 물 등 환경 문제는 제주포럼의 세션주제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안보 이슈의 경우 핵 문제 외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2016년 세션 제목 중에 4회 이상 등장한 단어의 리스트이다. 2016년 대주제는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었다. Asia와 New가 빈도수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

〈표 3〉

Words	TF	Words	TF
Asia	23	Peace	6
New	14	Cooperative	5
Cooperation	12	International	5
East	9	leadership	5
Order	8	Asia-Pacific	4
Future	7	Nuclear	4
Northeast	7	Role	4
Korea	6	Security	4

〈그림 6〉



년 2위를 차지하였던 Cooperation이 2016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고, China는 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6〉의 차트는 2016년 제주포럼 세션의 제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차트도 역시 2007년, 2009년 차트에 비해서 주제가 다양해진 것으로 보여준다. sustainable, environmental, tourism이 조합되어 하나의 작은, 그리고 다른 주제들로부터는 독립된 주제를 이루고 있으며, energy와 climate도 작은 주제를 이룬다. 그 외 각기 change와 action과 관련한 더 작은 주제가 있다. 또 Asia-Pacific, diplomacy, strategic, nuclear, rethinking이 조합되어 아태지역 핵 문제와 관련된 주제가 있으며, Asian, industry, international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집중된 주제가 있다. 2016년 차트는 포럼의 의제가 2007년/2009년에 비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sian, industry, international은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generic) 개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Asian, industry, international을 중심으로 세션 제목들이 연결된다는 것은 각 세션의 의제들이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5년 차트와 2016년 차트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주제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에 비해 2016년의 경우 주제 간 단절이 심하다.

세션의 제목을 기준으로 볼 경우 2015년, 2016년 제주포럼도 DRM을 통해 나타난 평균적인 다자안보대화과 다소 다른 성격을 보인다. 제주 평화포럼으로 개칭되던 기간에는 전통·비전통 안보 이슈보다는 다자안보 협력과 한국에 집중하였다. 대형종합포럼으로 변모한 이후에 주제의 다양성이 훨씬 증가하였지만, 전통적 안보 이슈는 역시 핵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비전통 안보, 신 안보 이슈는 기후와 환경 외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의 경우에는 세션주제 간 단절성도

눈에 띄었다.

세션 제목은 몇 단어에 지나지 않고 포괄적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세션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각 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션을 녹취한 기록이나 요약한 자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제주포럼 결과자료집에는 기초연설문인 경우는 전문이, 세션 토의일 경우에는 요약문이 포함되어 있다.

## VI. 제주포럼의 기초연설과 세션 토의: 2015, 2016년 대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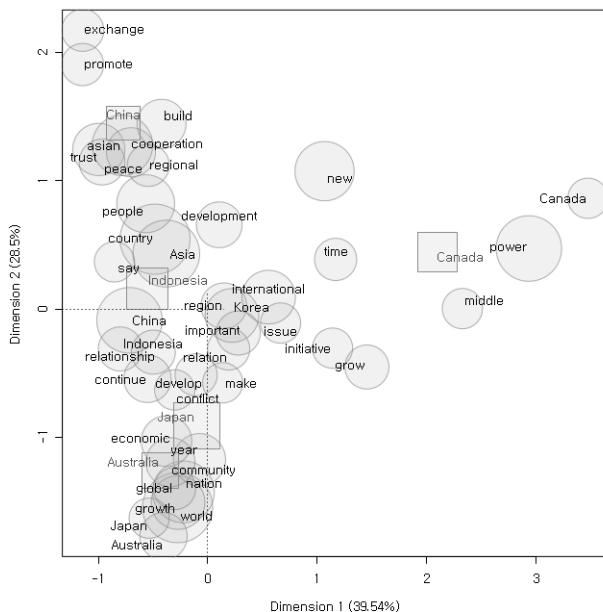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제주포럼에서는 기초연설자들이 대주제에 관하여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식으로 기초연설을 하게 된다. 대주제는 “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New Waves in Asia”, “Designing New Asia”와 같이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기초연설자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필요/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 1. 2015년 기조연설

2015년 제주포럼에서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John Howard 전 호주 총리, Joe Clark 전 캐나다 총리, 리 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총 5명이 기조연설을 했다. 2015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였다. 5명의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을 대응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차트에서는 우선,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는, 특히 일본과 호주는

〈그림 7〉



\* 차트에서 각 기조연설자는 각자의 국적으로 표시

연설문에서 서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리 샤오린 회장의 경우는 기조연설문에서 trust, peace, build, regional, asian, cooperation이 자주 등장하여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포럼의 대주제와 가장 가까운 연설을 하였다. 리 샤오린 회장의 주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커다란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뢰와 화합의 아시아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샤오린 회장의 주장이 좌측 최상단에 위치하게 된 것은 다른 기조연설자들이 포럼의 대주제와 차이가 나는 단어를 사용하여 연설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Joe Clark 총리의 연설에는 middle, power, Canada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Clark 총리의 주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같은 중견국가로서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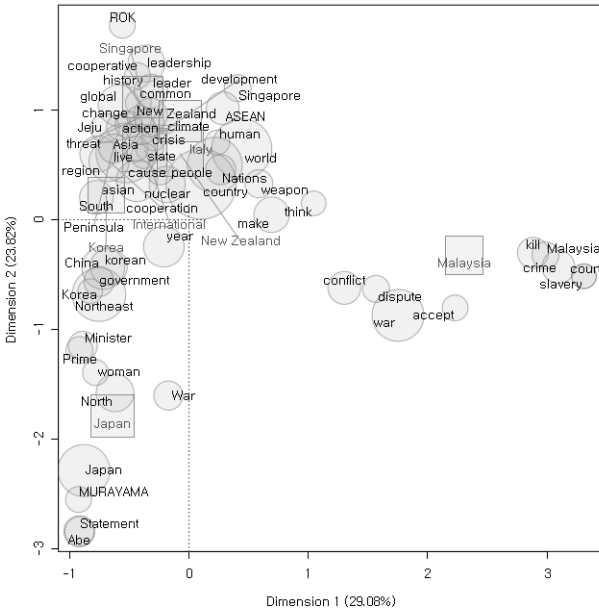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2016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의 분석에서도 인도네시아와 캐나다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2016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의 분석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독일, 캐나다, 중국의 중간지역에 있었고, 캐나다는 위의 차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따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2015년 포럼 대주제와 2016년 포럼 대주제가 다르고, 의견을 개선하는 상황이나 방식(개회식 기조연설 vs. 외교관 간담회)이 다르고, 연사도 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와 캐나다의 “특징”은 국가적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 2. 2016년 기조연설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James Bolger 전 뉴질랜드 총리,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Enrico Letta 전 이탈리아 총리 총 7명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 중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2013년에도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2016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그림 8〉



\* 차트에서 각 기조연설자는 각자의 국적으로 표시  
반기문 유엔 총장의 경우는 한국(Korean) 대신 국제(International)로 표기

Leadership”이었다. 7명의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을 대응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차트를 보면 먼저 황교안 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James Bolger 총리, 고축통 총리, Enrico Letta 총리가 기조연설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겹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주제에 포함된 단어들이거나 연관된 단어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조연설문에서 상당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따라서 상당히 다른 주제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무라야마 총리의 경우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문제에 관하여, 마하티르 총리는 전쟁, 살인, 범죄 등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기조연설자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과 서로 상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일까? 기조연설자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여, 공동의 행동이나 협력적 리더십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서 공동의 행동이나 협력적 리더십의 출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대화에서 핵무기나 통일이라는 단어가 양측에 의하여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핵 문제나 통일에 대하여 남북한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고 조만간 공동의 행동이나 협력적 리더십이 생길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공동의 관심사와 의제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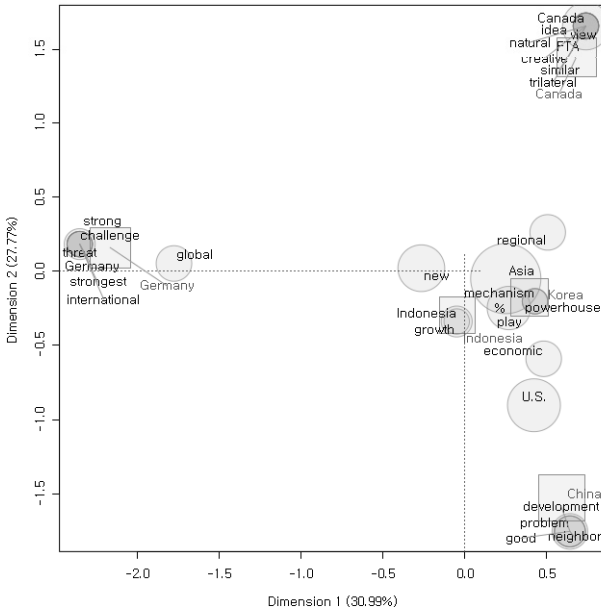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기조연설에서뿐만 아니라 외교관 좌담회 및 학술세션에서도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다음에서는 외교관 좌담회와 학술세션의 토의 내용을 분석한다.

### 3.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Ambassadors Roundtable)에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을 주제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회를 맡아

〈그림 9〉



론 볼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에릭 윌쉬 주한 캐나다 대사, 존 프라세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오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샤주캉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이 좌담회를 가졌다.

이 차트는 이들의 발언을 대응 분석한 것이다. 각국 대사가 사용한 단어군 옆에 그들의 국적을 표기하였다. 이 차트는 각국 대사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지만 각기 상당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중 사용하는 단어가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물론 준비해온 원고를 순서대로 낭독하는 개회식과는 달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참석자들이 다른 참석자와 같은 생각을 해도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 다른 참석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사들의 발언이 상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그들 간에 공유하는 인식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의 내용에 공감을 하고 논의된 내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참석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공통성이 증가하고 공통된 단어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위치하게 된다.

차트를 근거로 할 때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대사들 간에는 아직 공통된 인식이 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일, 캐나다, 중국 사이의 중간지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중재자나 가교의 역할이 가능해 보인다. 물론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중간지점에 더 가깝다.

각국 대사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대사의 경우 난민 문제, 테러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한 국가나 지역을 넘는 새로운 국제안보적 위협이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협

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과 아시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은 한국의 동반자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 대사의 경우 아시아 지역적 문제나 전통적 안보위협 — 예컨대 중국의 부상이나 미중 갈등, 북핵 문제 — 보다는 유럽이나 국제 문제, 비전통 안보 문제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 및 아시아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앞의 대응 분석 차트에서도 본 것과 일치한다.

인도네시아 대사는 중국의 부상, 영토 분쟁, 미중 갈등, 북핵 문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중국의 저성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여서 주요관심사가 아시아 역내 전통적 안보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트 상에는 인도네시아 대사가 열거한 구체적 사항들이 다 나오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나오지만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지역과 경제에 있음을 차트에서도 알 수 있다.

캐나다 대사의 경우 캐나다가 지리적 거리와 중견국이라는 위상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슈에 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해 참여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북극해 연안국 입장에서 한중일 3자간 북극해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동북아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달리 말하면 캐나다 대사의 경우 아시아의 신질서나 협력적 리더십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동북아나 아시아 문제를 대하는 캐나다의 자세나 입장을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준 UN 대사의 경우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이 높아진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ODA,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준 대사는 아시아 내에 역내 협력 장치가 없으나 아시아 내에서 마땅히 리더의 역할을 할 국가가 부재하다고 평가하였다.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powerhouse, mechanism, play 등의 단어가 부각된 것은 그의 주장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주강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은 중국이 주변국과 우호적 선린관계를 중시하며, 평화, 안정, 번영이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단결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모델을 참고는 하되 전적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차트는 이러한 중국 발표자의 주장과 일관되게 China, development, problem, good, neighbor를 보여주고 있다.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요약문의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한편으로 당연한 얘기이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논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사실이다. 독일 대사는 유럽의 문제, 글로벌 문제를 중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으며, 캐나다 대사는 동북아나 아시아를 대하는 캐나다의 자세와 입장을 주로 설명하였고, 오준 대사는 유엔 내부에서나 아시아 역내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장치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합심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인도네시아 대사의 경우만 자국의 정책이나 관점을 설명하는 대신 아시아 지역 내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즉, 가장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그가 발언의 모두에서 제주포럼의 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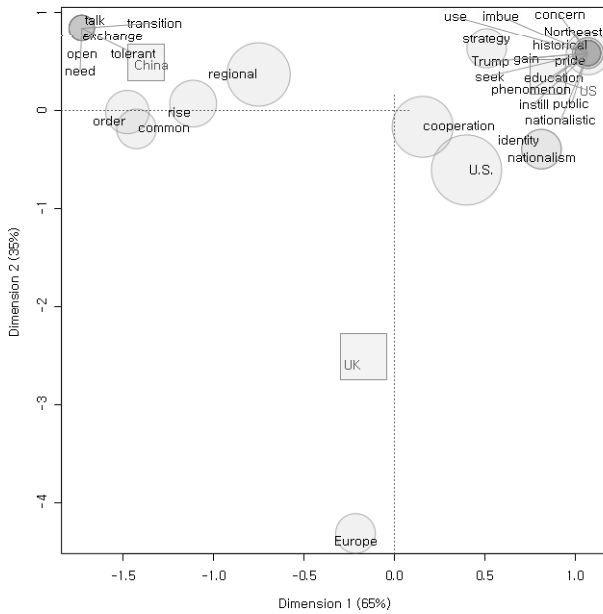
제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015년 기조연설에 이어서 2016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의 발언을 대응 분석한 차트에서 공통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연사의 발언이 자국보다는 지역중심적이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 4.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 세션

제주포럼에서는 “Towards New Cooperative Leadership in Asia: Theory and Practice”를 주제로 왕용 베이징대학 교수 겸 국제정치경제 센터 소장, 존 닐슨라이트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 존 들리 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참가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대학교와 싱크탱크 소속이기 때문에 현직 외교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차트를 보면 전문가들의 대화도 현직 외교관들의 대화에 못지않게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참가자는 rise, transition, open, tolerant, regional, order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인식을 달래고 중국의 부상을 포용하는 개방된 지역질서의 필요성을 얘기하였다. 미국 참가자는 US, strategy, Trump, nationalistic, education, concern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고, Trump 현상을 포함한 민족주의적 경향의 발현, 그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림 10〉



영국 참석자의 경우 사용한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참가자는 아시아에서 협력적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를 8개 나열하고 각국의 대응과 현존하는 국가적·지역적 불안요소 등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이 차트를 근거로 보면 현직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학자들 간에도 공유하는 인식이 크지 않다. 현직 외교관 차트에서와 달리 이번 차트에서는 참가자들의 사이에서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가자도 부재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

이 캐나다, 독일, 중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였고, 2015년 기초연설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앙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였다. 한편, 2016년 기초연설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UN 연사의 연설내용이 거의 겹쳤고, outlier인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주제가 달랐지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일본과 말레이시아도 아시아 역내 협력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기보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경우는 한일 문제의 해결을, 마하티르 총리의 경우는 전쟁의 근절을 우선 강조하였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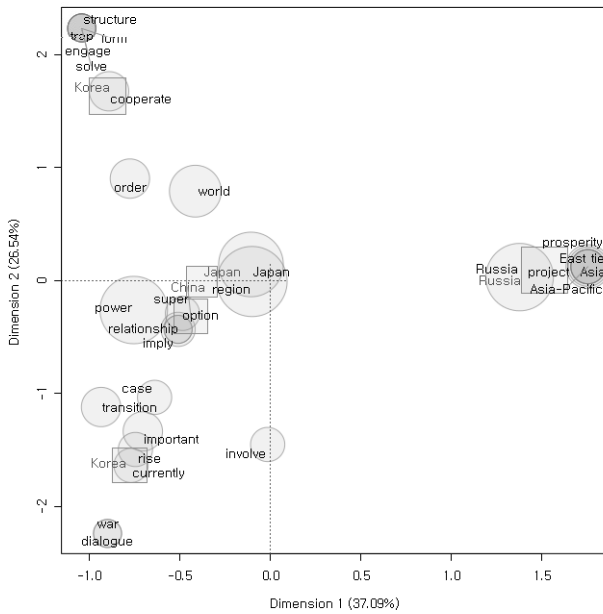
## VII. 제주포럼의 세션 토의: 아시아의 신질서와 미중관계

### ■ “미중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세션

2016년 제주포럼에는 대주제의 연장선에서 아시아의 신질서와 미중 관계를 진단하는 세션(“Asia’s New Security Order and the Role of the ROK-Japan-U.S. Relationship”)이 개최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미중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U.S.-China Relations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세션은 김숙 전 주 유엔 대사가 사회를 보고, 김봉현 주 호주 대사, 세르게이 세바스타야노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옌쉐퉁 중국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히라이 히사시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교수/전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이 발제하였다.

두 명의 한국 참가자, 중국 참가자, 일본 참가자는 차트의 왼쪽의 위

〈그림 11〉



에서부터 아래로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 참가자는 차트의 혼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에 위치한 두 명의 한국 참가자, 중국 참가자, 일본 참가자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 power transition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발언 요지를 읽어 봐도 확인할 수 있고 transition, rise, relationship 등의 단어로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러시아 참가자는 세계가 “다중심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동북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두 명의 한국 참가자가 각기 상단과 하단에 위치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단의 한국 참가자

(김봉현 주 호주 대사)는 미중 간 세력전이가 갈등을 낳을 것인가 평화를 낳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교류의 확대, 대화의 증가로 인해서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상단의 한국 참가자(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만든 구조와 중국이 만든 구조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차트에서 중국 참가자와 일본 참가자가 근접하여 위치한 것은 중국 참가자와 일본 참가자의 상황인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참가자의 주장과 달리 중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아시아에서 다극화가 아니라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참가자와 일본 참가자의 차이는, 중국 참가자의 경우 역내 불안의 근원은 미국이고 아시아는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며 안보대화가 빈번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 참가자는 상단의 한국 참가자와 비슷하게 양극화 구조 속에서 일본의 선택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단어를 통해서 파악하기 힘들지만 — 따라서 텍스트의 분석은 필요하다 — 일본 참가자가 상단의 한국 참가자와 가깝다는 면에서 상단의 한국 참가자와 일본 참가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 VIII. 제주포럼의 세션 토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제

제주평화연구원의 주최로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세션이, 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와 이브 티버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후 치우핑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차닌 티라 나 탈랑 태국 팀마삿대학교 교수, 막무르 클리앗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의 발표, 그리고 청츠위 쿠익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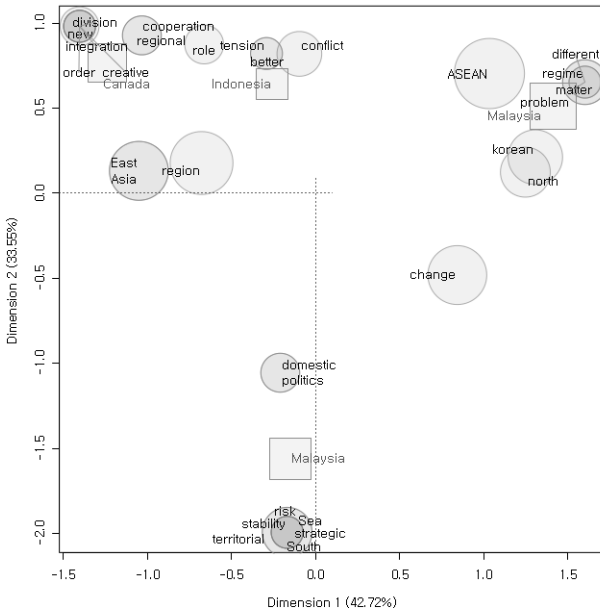
### ■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제” 세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인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보는 다양성이 잘 드러났다.

캐나다 참가자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특히 패권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환기의 동아시아 지역 시장은 안정적인 제도 없이는 올바르게 작동하게 힘들다고 주장하고,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규범 혹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말레이시아 참가자는 “전략적 안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전략적 안정”이란 과거 많이 사용된 개념이지만 최근에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 문제 혹은 남중국해 분쟁의 위험성을 관리하

〈그림 12〉



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태국 참가자는, 현재 아세안이 많은 정치적 혹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규범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족 분쟁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아세안은 더욱더 개방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접촉면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참가자는 북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아세안 내에서도 북한 또는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 또는 통일과 관련해 우호조약 또는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세안은 북한 정권의 점

진적인 해체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아세안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것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4명의 참가자들은 차트 및 발제 요지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들의 생각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 IX. 요약 및 결론

제주포럼이 이제 주요한 역내 포럼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매년 각국의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에서부터 현직 외교관, 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적, 소속, 역할을 가진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지역과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까지는 제주포럼이 논의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선례가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내 엘리트들의 인식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제주포럼의 대주제, 세션 제목, 기조연설, 세션 토의 내용을 선별해서 분석하여 봤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서자료의 분석에 특화된 KH Co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KH Coder로 분석된 결과를 재확인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제 요지도 같이 검토하였다.

제주포럼은 역내 “평균적인” 다자안보대화에 비해서 다루는 주제와

지역에 있어서 특색을 지닌다. 초기에는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가 양대 주제였고,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신한 후에도 핵 문제를 제외한 전통 안보 문제, 환경 문제를 제외한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으며, 대형종합포럼으로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주제 간의 단절성이 눈에 띄었다.

기조연설에서부터 현직 외교관 좌담회, 학자들 간의 토의에 이르기까지 참석자의 역할, 위상, 소속, 주제를 불문하고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성이 모두 존재하였다.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다 보니 한편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주최 측이 연설이나 토의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트상의 위치나 사용 단어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큰 국가들이 존재하였다. 소위 역외 국가—캐나다나 독일,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의 경우는 대응분석차트에서 종종 외곽에 위치하여 역내 국가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발언 요지문을 검토를 통해서도 이들 국가들은 관심사나 문제 인식, 상황 정의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인식이 다른 두 국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도 종종 눈에 띄어서, 그들이 국제여론을 이끄는 중간자나 교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예컨대, 인도네시아가 2015년 기조연설과 2016년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을 대응 분석한 차트에서 국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만 살펴본 사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니다.

제주포럼 결과의 분석은 인식조사 과정에서 놓쳤던 재정의 문제, 1국 조사의 한계, 엘리트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제주포럼의 결과는 물론 심도 있는 대면조사나 체계적인

설문조사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지만 포럼이 발전해가면서 축적되는 자료의 양이나 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와 협력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 엘리트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

향후 과제는 한편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내 엘리트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제주포럼 (<http://www.jejuforum.or.kr/>).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http://www.jcie.or.jp/drm/>).

KH Coder (<http://khc.sourceforge.net/en/>).

- 국문

이 연구는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서 자료의 분석에 특화된 KH Co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주포럼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주포럼은 역대 “평균적인” 다자안보대화에 비해서 다루는 주제와 지역에 있어서 차별성을 지닌다. 초기에는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가 양대 주제였고,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신한 후에도 핵 문제를 제외한 전통 안보 문제, 환경 문제를 제외한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다.

제주포럼의 참석자들은 각각의 역할, 위상, 소속, 주제를 불문하고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성이 모두 존재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트 상의 위치나 사용 단어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큰 국가들이 존재하였다. 한편, 인식이 다른 두 국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도 종종 눈에 띄어서, 그들이 국제여론을 이끄는 중간자나 교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주제어] 제주포럼, 다자안보대화, 엘리트 인식, 질적 자료 분석, KH Coder

- 영문

This study analyzes the speeches, presentations, and comments by Jeju Forum speakers in order to learn how similar or different their views are, what issues they are interested in, and what concepts they use in reasoning, using an open-source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gram, KH Coder.

The Jeju Forum is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s in East Asia in terms of agenda and geographical focus.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Jeju Forum,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were its main agenda and geographical focus. Even after it became an “omnibus” forum, the Jeju Forum does not addres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s much as other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s in the region do, with the exception of the environment. Among traditional security issues, the Jeju Forum is almost exclusively focused on nuclear issues.

Speakers from the same country are often found to share similar views, despite differences in their professions, affiliations or status. There were some “outlier” countries, and speakers from these countries have views that differ from those views held by the others. Speakers from certain countries are found to have “median” views, implying that they may be able to act as bridges when other countries are divided.

[Key words] Jeju Peace Forum,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Qualitative data analysis, KH Coder

## 필자 소개 (원고 게재순)

### ▶▶ 도종윤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지역통합연구부장)이며 한국유럽학회 연구이사, 'EU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임.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및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ULB)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연세-SERI EU센터 Post-Doc 및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시간강사를 역임함.

주요 출간물로는,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 유럽연합의 대북 전략 문서를 시험적 사례로”, “유럽회의주의와 2014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전략: 대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 이론 논쟁과 실제”, “유럽연합의 KEDO 가입: 참여 요인, 평가 그리고 합의”, “EU 매뉴얼: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번역서) 등이 있음.

▶▶ 이성우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University of North Texas 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의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한인택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였음.

국제정치경제, 핵전략,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최근 연구로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가 있음.



